

2001. 12. 22(토)
제117회 서초구의회 정례회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
활 동 보 고 서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

〔 목 차 〕

Ⅰ. 활동개요	1
1. 활동목적	1
2. 활동방향	1
3. 활동기간	1
4. 특별위원회 구성	1
5. 활동경과	2
Ⅱ.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관련현황	3
1. 왜곡경위 및 대처내용	3
2.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주요 왜곡 현황	4
3. 일본의 2002년도 중학교역사교과서 채택율	7
Ⅲ. 활동 결과	8
1. 주한국 일본대사관 방문	8
1). 활동경위	8
2). 활동경과	8
3). 방문활동 내용	9
4). 방문결과	12

2. 대일본 스기나미구의회 결의문 채택	12
3. 역사교과서 왜곡중단추진 활동 홍보	15
1). 홍보경위	15
2) 서초구 소식지 게재	15
3) 서초구내 전광판 게재	16
4) 역사왜곡 시정촉구 플래카드 게첨	17
Ⅳ. 문 제 점	17
Ⅴ. 결 론 (총 평)	18

※ 참고자료

1. 역사왜곡에 대한 정부의 수정요구 내용
2. 한국의 수정요구에 대한 일본의 의견
3.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중단촉구결의문
4.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개요 및 시정요구이유
5. 일본국 무라야마 내각총리대신 담화
6.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관령부분)
7. 플래카드 게첨 장소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안)

1. 활동 개요

1. 활동목적

일본정부가 청소년들에게 과거사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한·일 양국간의 역사적 대립을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의 왜곡행위를 하는데 대하여, 이를 중단 촉구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려는 것임.

2. 활동방향

- 활동계획서 작성
- 일본대사관 항의방문
- 일본역사왜곡교과서 시정촉구홍보
- 일본상품 불매운동 전개

3. 활동기간

- 특별위원회구성일로부터 일본정부의 왜곡역사교과서 수정 확정시까지
(※ 일본의 「새로운역사교과서를 만드는모임측」의 교과서 채택율이 미미하여 이시점에서 활동을 종료함)
〈 2001. 7. 20 - 2001. 12. 20. 〉

4. 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정길자 위원, 간사 : 장경주 위원
- 위 원 : 최정규 위원, 박찬선 위원, 김옥자 위원,
허명화 위원, 장영화 위원, 박홍달 위원
- 사무보조 : 3명(김재근 전문위원, 직원2명)

5. 활동경과

일시	차 수	주 요 내 용
2001 7. 20 (금)	제113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위원회구성결의 ○ 특별위원회위원선임(8명으로 구성)
	제113회 정례회 특위제1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간사 선임 (위원장 : 정길자, 간사: 장경주) ○ 일본정부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재수정 거부에 대한 서초구의회 결의문 채택
2001 8. 6 (월)	제113회 정례회 폐 회중 특위제1차회의	○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2001 8.10 (금)	제113회 정례회 폐 회중 특위제2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촉구를 위한 구의회 의원의 일본대사관 항의방문 - 정길자 위원장의 4명
2001. 8. 13 ~ 9.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구내 전광판 홍보 ○ 홍보내용 - 일본대사관 항의방문 및 역사왜곡 시정촉구 ○ 장소 : 잠원동 37-9외 7개소
2001. 8. 13 ~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레카드 게첨 ○ 게첨장소 : 18개소 ○ 내용 : 역사왜곡 시정촉구
2001. 8.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구 소식지 게재 ○ 내용 : 특별위원회 활동내용 및 역사 왜곡에 따른 대 구민 경각심 고취 ○ 발간 : 약14만부
2001 12.20 (금)	제117회 정례회 특위제1차회의	○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추진 특별 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 채택

II.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현황

1. 왜곡경위 및 대처 내용

역사교과서 왜곡 경위

- 2000년 4월경 기존7종 중학교 역사교과서 및 우익성향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측의 교과서 후소샤 등 총8종의 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신청하였으나, 일본교과서 검정 신청본상의 역사왜곡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측 및 아시아 각국의 반발에 직면하였으며
- 우리정부의 거듭된 역사왜곡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부과학성의 2001년 4월3일 왜곡된 역사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따라 외교부 대변인의 유감표명 성명 발표 등 우리정부의 강력한 유감과 국민적 분노를 전달하였으며 또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을 출범시켜 2001. 5. 8일 35개 항목에 대한 수정요구 자료를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2001년 7월2일 후소샤측이 9개항목(우리의 수정요구 5개항목 포함)에 대하여 미흡한 자율수정 발표 및 2001년 7월 9일 우리의 수정요구에 대하여 일본문부과학성의 검토결과 발표는 우리의 수정요구를 사실상 거부함.

서초구의회 등 시민단체의 대응

서초구 의회에서는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중단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문 채택 및 일본대사관 항의방문등의 노력과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역사왜곡에 대한 항의로 일본의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이버 시위 및 일부 시민단체의 일본상품불매운동, 국내외 각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역사왜곡에대한 규탄시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본의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역사왜곡 저지 노력, 일본의 양심있는 시민단체 및 시민과 연대하여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거부 추진과 역사왜곡을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함.

2. 일본역사교과서의 주요 왜곡 현황

-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이 자국의 중학교 교과서에 역사를 은폐·왜곡 또는 미화하기 위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제명	일본현행역사교과서의 왜곡	일본새역사교과서의 검정신청본
임나일본부설	<p>동경서적(東京書籍) 중국·조선과의 교류가 왕성해지다 32~33쪽 야마토 국가는 백제와 소국(小國)이 분립하고 있던 가라(加羅; 任那)지방의 국가들과 결탁하여 고구려·신라와 싸웠다.</p>	<p>후소샤(扶桑社) 야마토 조정의 외교정책 - 한반도의 유직입과 일본(37-38쪽) ○ 야마토 조정은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출병했다. 야마토 조정은 반도 남부의 임나(가라)라는 곳에 세력권을 차지했다. ○ 그러나 백제와 임나를 기반으로 한 일본군의 저항으로 인해 정복은 이루지 못하였다.</p>
삼국의 조공설	<p>일본서적(日本書籍) 신라의 조선통일 (47쪽) 당이 고구려·백제를 정복하고자 군대를 보내자 신라는 당과 결속하여 2국을 멸망시켰다. 이 때 일본도 백제에 구원군을 보냈으나 대패하였다.</p>	<p>후소샤(扶桑社) 조공 (38쪽) ○ 야마토 조정과 백제는 중국의 남조(南朝)에 조공을 하였다. ○ 고구려는 북위(北魏)에 조공을 하였고 동맹관계에 있었다. 야마토 조정의 자신 (40쪽) 고구려가 돌연 야마토 조정에 접근해와 조공한 것이다.</p>
임진왜란	<p>일본서적(日本書籍)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122쪽) ○ 조선에 군대 15만명을 침입 ○ 조선의 민중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드디어 수군의 힘도 증강되고 명의 원군도 있어 일본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p>	<p>후소샤(扶桑社) 조선 출병 (123쪽) ○ 히데요시는 다시 중국의 명(明)을 정복하여 천황과 자신이 거기에 살고 동아시아에서 인도까지 지배하고자 하는 거대한 꿈에 빠져들어 1592년 15만 대군을 조선에 보냈다. ○ 출병의 결과 조선의 국토와 사람들의 생활이 현저히 황폐해졌다.</p>
조선통신사	<p>일본서적(日本書籍) 막부의 대외정책 - 조선과 중국 (131쪽) 장군이 바뀔 때마다 400명 정도의 조선 사절단(통신사)이 방문</p>	<p>후소샤(扶桑社) 왜국 하의 대외관계 (133쪽) ○ 막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절 대마도(對馬)의 중(宗)씨를 통하여 히데요시의 출병으로 단절되어 있던 조선과 국교를 회복하였다 ○ 조선으로부터는 장군이 바뀔 때마다 통신사로 부르는 사절이 에도를 방문 ○ 부산에는 '중(宗)씨의 왜관(倭館)'이 설치되어</p>
정한론	<p>일본서적(日本書籍) 새 정부와 세계-중국·조선과 관계(186쪽) 사족(士族)들은 군대를 보내 조선을 공격하자고 했다(정한론).</p>	<p>후소샤(扶桑社) 이와쿠라 사절단과 정한론 (204-205쪽) ○ 일본의 개국 권유를 거절한 조선의 태도를 무례라고 하여, ---정한론이 터지나왔다. ○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는 자신이 사실로 조선에 가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자신이 조선에 가서 살해당하면 그것을 명목으로 일본이 출병</p>

주제명	일본현행역사교과서의 왜곡	일본세역사교과서의 검정신청본
동학농민운동과 청·일 전쟁	<p>일본서적(日本書籍) 갑오농민전쟁(206~207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동학을 신앙하는 농민이 중심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다(갑오농민전쟁). ○ 각지에서 정부군을 격파하고 수도(서울)에 까지 입박하였다. ○ 동학의 난 	<p>후소사(扶桑社) 동학농민운동 (220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의 난(갑오농민전쟁)이라고 불리는 농민폭동이 일어났다. 동학당은 서양의 기독교(서학)에 반대하는 종교(동학)를 신앙하는 집단이었다. ○ 수도 한성에 육박하는 기세를 보였다.
	<p>일본서적(日本書籍) 일·청전쟁 (206-207쪽)</p> <p>일본은 ---단독으로 개혁안을 조선 정부에 강요했다. 그리고 일본은 회담이 불만이라며 왕궁을 점령하고 조선 정부에 청군의 철수를 요구하게 했다. 이어 청의 해군을 공격한 후 전쟁을 선포하여 일·청전쟁을 시작했다.</p>	<p>후소사(扶桑社) 일·청전쟁 (218-220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은 최후의 유력한 조공국인 조선만은 잃지 않으려고 하여,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삼게 되었다. ○ 조선은 청에 진압을 위한 출병을 요구했고 일본도 갑신사변후 청과 합의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일-청 양군이 충돌하여 일-청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화도사건	<p>일본서적(日本書籍) 중국·조선과 관계 (186~187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정부는 조선에 압력을 가하여 일조수호조규(日朝修好條規)를 체결하였다 ○ 불평등 조약을 조선에 강요 	<p>후소사(扶桑社) 청·조선과의 국교수립 (202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군과 교전한 사건(강화도 사건, 1875년)을 계기로 일본은 재차 조선에 국교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청조가 조선에 일본과 국교교섭 개시를 허가한 결과 1876년 일조수호조규(日朝修好條規)가 체결되었다. ○ 조선과 국교문제도 해결
러·일전쟁	<p>일본서적(日本書籍) 일·러전쟁-전쟁시작 (210-211쪽)</p> <p>1904년 일본은 조선의 인천항에서 러시아 함대를 공격한 후 전쟁을 선포하여 일·러전쟁이 시작되었다.</p>	<p>후소사(扶桑社) 일·러전쟁과 전쟁의 추이 (224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는 만주의 병력을 증강하여 조선 북부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은 일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강되는 것은 명확했다. (일본)정부는 더 늦기 전에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할 결의를 굳혔다. ○ 1905년 9월 포츠머스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조선)의 지배권을 러시아로부터 인정받았고, ○ 유색인종국 일본이 당시 세계 최대의 육군대국이었던 백인제국 러시아에 승리한 것은 세계의 억압된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무한한 희망을 주었다.

주제명	일본헌행역사교과서의 왜곡	일본세역사교과서의 검정신청본
한국강제병합	<p>일본서적(日本書籍)</p> <p><u>한국병합 (217쪽)</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일본의 침략에 대하여 조선의 민중은 무기를 들고 각지에서 봉기하여 의병 운동 등을 일으키고 강력하게 저항하였으나, 일본은 군대로 이를 진압하였다. ○ 1910년에는 일본의 군대와 경찰이 서울을 점령하는 가운데 한국의 황제가 국가를 통치하는 권한을 일본에 위임하는 조약에 조인토록 함으로써 한국을 일본의 영토로 병합하였다. 이를 한국병합이라고 한다. 	<p>후소사 (扶桑社)</p> <p><u>한국병합 (242쪽)</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직접 지배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다른 나라가 차지하는 것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통치자로서 신흥국 일본의 등장은 3국에 있어 좋은 상황이었다. ○ 1910년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였다(한국 병합). 이것은 동아시아를 안정시키는 정책으로서 구미열강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이었다. ○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반드시 이익을 가져다준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것이 실행된 당시로서는 국제관계 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 반대파의 일부로부터는 심한 저항
관동대지진	<p>일본서적(日本書籍)</p> <p><u>관동대지진 (240쪽)</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천명의 조선인과 수 백명의 중국인이 군대·경찰, 주민 등이 만든 자경단에 의해 학살되었다. 	<p>동경서적(東京書籍)</p> <p><u>관동대지진 (242쪽)</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인이나 사회주의자가 폭동을 일으킨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되어 많은 조선인, 중국인, 사회주의자 등이 살해되었다. <p>[사진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조선인이 학살되었다. 희생자는 수 천명
강제동원과 황민화정책	<p>일본서적(日本書籍)</p> <p><u>모든 것을 전쟁에 (259쪽)</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인에 대해서도 일본식의 성(姓)을 따르도록 하고(창씨개명) 신사참배가 강요되었으며 일본인에 동화시키려는 황민화 교육이 진행되었다. <p><u>사치는 적이다 (264쪽)</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으로부터 70만명, 중국으로부터 4만명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연행하여 공장이나 광산·토목공사 등에 혹독한 조건에서 일하게 하였다. 조선, 대만에도 징병제를 실시하여 많은 조선인, 중국인이 군대에 들어갔다. 	<p>동경서적(東京書籍)</p> <p><u>강화되는 통제 (256쪽)</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씨개명을 강력히 추진했다. 나아가 지원병제도를 실시하고 조선 사람들을 전쟁터에 동원했다.
군대위안부	<p>일본서적(日本書籍)</p> <p><u>조선전쟁의 장기화와 중국·조선 (263쪽)</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안부로서 의사에 반하여 전쟁터에 보내진 어린 여성도 다수 있었다. <p><u>사치는 적이다 (264쪽)</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여성을 위안부로서 종군시키고 가혹하게 다루었다. 	<p>후소사 (扶桑社)</p> <p>교의로 누락시킴</p>

주제명	일본현행역사교과서의 왜곡	일본새역사교과서의 검정신청본
조선의근대화와 일본과의 관계	<p>동경서적(東京書籍) <u>동아시아의 정세 (213쪽)</u> 구미열강의 아시아 침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조선에 진출하지 않으면 일본의 장래도 위험하다며 대외팽창정책을 강화하고 있었다.</p>	<p>후소샤(扶桑社) <u>한반도와 일본의 안전보장 (218-219쪽)</u> 조선의 개국 후 그 근대화를 돕기 위해 군재개혁을 원조했다. 조선이 외국의 지배에 굴하지 않는 자위력 있는 근대국가가 되는 것은 일본의 안전에 있어서도 중요했다.</p>

주제명	후소샤(扶桑社)의 검정통과본	일본새역사교과서의 검정신청본 (후소샤(扶桑社)의 검정신청본)
한반도위협설	<p><u>한반도와 일본의 안전보장</u> ○ 이 일본을 향해 대륙으로부터 팔 하나가 튀어나와 있다. 그것이 한반도이다. 한반도가 일본에 적대적인 대륙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 일본을 공격하는데 꼭 알맞은 기지가 될 것이고, 후배지가 없는 섬나라 일본은 자국의 방위가 어려워질 것 (*주한 일본대사관 제공자료)</p>	<p><u>한반도와 일본의 안전보장 (218쪽)</u> ○ 이 일본을 향하여 대륙에서 한 개의 팔뚝이 돌출되어 있다. ○ 한반도가 일본에 적대적인 대륙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일본을 공격하는 철호의 기지가 되어 배후지가 없는 섬나라 일본은 자국의 방위가 곤란해진다. ○ 한반도는 일본을 향해 항상 늘어날고 있는 흉기</p>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japan/>) 인용자료

3. 일본의 2002년도 중학교역사교과서 채택율

-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일본의 “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이 집필한 후소샤(扶桑社)판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한국 국민 및 일본내 양심세력의 채택 반대운동 영향으로 내년도 중학교용 역사교과서 시장의 0.039%의 저조한 비율을 차지함(2001. 8. 31현재)

○ 채택현황

발행자명	수요수	비율	전회비율(2000년도채택)
계	1,320,107권	100%	100%
東京書籍	676,434권	51.2%	40.4%
大阪書籍	185,372권	14.0%	18.8%
教育出版	171,533권	13.0%	18.0%
帝國書院	144,215권	10.9%	1.9%
日本書籍	77,718권	5.9%	13.7%
清水書院	33,346권	2.5%	3.9%
日本文教出版	30,968권	2.3%	3.3%
扶桑社	521권	0.039%	---

* 일본대사관(<http://www.japanem.or.kr/>) 인용자료

Ⅲ. 활동 결과

1. 주한국 일본대사관 방문

일본정부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거사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된 역사관을 교육하여 이웃국가로서 선린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행위와 각종만행을 은폐, 왜곡, 미화하는 교과서를 검정하면서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채택을 하도록 노력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중단 및 시정을 요구하고자 서초구의회대표단이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였음.

1) 활동경위

40만 서초구민의 대표기관인 서초구의회에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에 따른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2001. 7. 20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중단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한국 일본대사관을 방문, 서초구의회의 입장을 전달함.

2) 활동경과

- 2001. 8. 6 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를 채택, 같은 날 일본대사관에 방문계획 통보
- 2001. 8. 10 일본대사관 방문의 건을 상정, 대사관을 방문하게 된 것임.

3. 방문활동내용

가.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01. 8. 10. 11:00 ~ 11:45
- 방문장소 : 서울시종로구 중학동18-11 주한국 일본국대사관
- 방 문 단 :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 소속 5명
 위원장 정길자,
 위 원 최정규, 김옥자, 장영화, 박흥달
- 일본국대사관 안내 및 면담
 - 안 내 : 일본대사관정치부 3등이사관 야마고다카히로(山後貴弘)
 - 면 담 : 일본대사관 정치부참사관 야마 노 우치 간지(山野内勘二)

나. 방문요지

-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중단촉구 서초구의회 결의문낭독 및 전달
- 서초구의회의 일본역사교과서 왜곡개요 및 시정요구 이유낭독, 전달

다. 진행경과

- 위원장의 위원소개 및 방문경위설명
- 일본대사관참사관의 인사 및 방문에 대한 감사인사
-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왜곡중단 촉구결의문 낭독 및 전달
-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 유감 표명과 교과서왜곡 개요 및 시정요구이유 낭독 및 전달
- 일본참사관의 일본역사에 대한 왜곡에 대한 시정노력 및 미시정에 대한 인식피력

라. 주요 의견 교환 내용

한) 새일본역사교과서는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한일양국간의 우호 협력에 반하는 일이므로 서초구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문을 채택하고 왜곡교과서 시정을 위해 오늘 대사관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결의문을 낭독 및 전달하겠음.

일) 일본대사관에서는 미래지향적인일관계를 위해 노력중이나 교과서와 관련하여 한일관계분위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유감이며 한국시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청취 하겠음.

한) 서초구의회와 일본스기나미구와 자매결연시 일본을 방문한 바 깨끗하고 친절한 인상을 갖고 있으며 좋은일로 대사관을 방문해야 하나 교과서 왜곡문제로 방문하게 되어 유감이며, 일본학생들에게 일본 역사를 교육시키기 위한 교과서가 일본의 우월성 강조하기 위해 진실성이 없는 역사로 잘못 가르치고 앞으로 학생들이 진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과거 36년간 한국을 지배할 당시 민족저항운동을 폭동으로 기록하는 것 등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을 반성할 때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며 장래 한·일간의 우호를 위하여도 어린학생들에게 역사의진실을 가르치기 바라며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 및 관철되도록 요망함.

일) 말씀해 주신 결의문배경, 내용등을 일본에 전달하겠음 개인적으로나 일본정부에서도 지적해 주신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으며 일본정부에서는 과거 역사를 왜곡하거나 미화할 의사는 전혀 없으며 과거 고통과 손해를 드린데 대하여 반성하고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람.

이는 일본총리담화문에 내용이 잘 담겨있음. (별첨 담화문 참조)

일본역사교과서는 민간에서 자유롭게 집필하고 있으며 중학교교과서는 8개소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8개교과서 중 어느교과서를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전국에 12,000여 중학교가 있으나,

여러분이 주장하는 교과서를 채택하는 곳이 거의 없으며 일본내에서도 비판이 많으며 일본국민의 양식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관계발전을 바라고 있음 내년에는 월드컵공동개최가 있으며 한일관계는 문화 경제 및 안전보장등 폭넓은 관계가 있음.

역사교과서 때문에 우호관계가 손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양국관계발전을 위해 적극노력하겠습니다.

결의문전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한) 교육위원회에서 선정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요구함

일) 검정제도 하에서는 명확히 잘못된 것은 수정요구 하겠으나 회사의 의견이나 역사관이 명백하게 잘못되지 않는 것은 수정요구 할 수 없음.

1억2천만인구 중 공산주의자, 천황제 폐지론자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민주사회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확일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될 것으로 보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역사관이 달리 보일 수도 있음.

한) 장래의 한일간 지속적인 우호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일본역사교육을 진실되게 교육하도록 당부드리며 역사교과서의 수정요구이유를 낭독 및 설명함.

일) 일본의 역사관은 일본총리의 담화문에 잘 담겨있으므로 이해바람.

한) 일본스기나미구와 서초구가 자매결연되어 있는데 스기나미구가 불채택하게 됨을 감사하며 자라나는 세대에 진실된 역사를 교육하여 한일양국간 우호 협력지속을 기대하며 일본의 양식있는 행동을 기대함.

일) 일본정부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한국의 주장에 내정간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한일양국간 우호협력을 위해 더욱노력 하겠으며, 일본대사관방문에 감사드리고 전달된 내용을 본국에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4). 방문결과

가. 결의문 본국전달 약속

- 일본대사관 측에서 대사관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서초구의회 결의문 및 수정요구이유등을 본국정부에 전달약속하였으며 교과서 문제로 한·일양국간 우호교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나. 기초의회의 위상제고

-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역사왜곡에 따른 일본국 대사관방문을 통하여 결의문등을 전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관심 표명 및 위상을 제고함.

2. 대 스기나미구의회 결의문 채택

- 채택일시 : 2001. 7. 20
- 결의주문 : 일본 정부의 왜곡된 중학교 역사교과서 재수정 거부에 대한 서초구의회 입장을 일본 스기나미구 의회에 표명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
- 결의문 본문

수신 : 일본동경도 스기나미구의회 고이즈미야스오의장님 외
의원 일동 귀하

제목 : 일본정부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재수정 거부에 대한
서초구의회 의 입장채택결의안

평소 서초구와 스기나미구간 우호협력을 위한 각종 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15일 서울지역에 시간당 유래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진심어린 위로와 조속한 회복을 기원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새역사를 만드는 모임측에서 집필하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하여 만든 2002년도 중학교용 새교과서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여 일본정부가 과거 한국강제병합 및 식민지 시대, 그리고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군대위안부와 2차대전 및 그 이전 한국과 외국을 침략하여 저지른 각종만행을 호도 하거나 미화하여 교육하려 하고 있는데 대하여 피해당사국의 국민으로서 심한 우려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새로운 우호관계발전을 기대하여 온 우리나라 국민 및 아시아 여러나라로 하여금 통한의 상처와 기억을 또다시 기억하게 하여 이웃나라간 우호와 평화대신 일본정부가 또다시 군국주의로 과거의 씻을 수 없는 처참한 역사를 재현하려는 의심과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역사의 진실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역사를 거스리는 것이며 자라나는 새싹들이 역사의 진실을 공부하여 다시는 쓰라린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아니하고 화해와 협력속에 평화로운 이웃으로 영원히 지낼수 있도록 하는데 역행을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일 양국은 3차례에 걸친 일본문화개방과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예정등으로 인한 민간교류가 계속적으로 늘어 나으며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며 미래지향적인 관계설정을 위해 상호 협조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나 일본정부가 잘못된 역사교과서의 재수정을 거부하고 국수주의적 태도를 취함은 민간교류활동의 근간을 훼손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간의 우호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정부와 왜곡 교과서를 만든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자신들의 교과서 채택을 위해 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양식있는 일본 학부모와 학자 및 시민단체 등에서 왜곡 교과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음은 일본의 양심이 살아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일본정부가 조속히 재 수정하여 진실된 역사를 자라는 세대들이 바로 알아서 한국과 일본이 우호 협력정신으로 함께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잘못 수정된 역사교과서 채택을 단호히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회 및 구민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1. 7. 2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일동

3. 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 활동 홍보

일본정부는 과거 역사에 대한 왜곡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 하면서 최근 일본제국주의 침략행위와 각종 만행을 은폐, 왜곡,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를 검정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본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한 시정촉구 및 일본정부의역사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홍보하여 이같은 역사왜곡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 및 역사인식을 고취코자 홍보

1) 홍보경위

-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시 역사 왜곡중단추진활동의 대 구민 홍보 및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어 제113회 정례회 폐회중 특위1차 회의(8. 6)시 활동계획에 채택

2) 서초구 소식지 게재 홍보

- 게재일 : 2001년 8월
- 게재부수 : 약14만부
- 주요내용 : 서초구의회는 제113회 정례회에서 8명의 의원으로 “일본의역사 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정길자의원(서초2동), 간사에는 장경주의원(양재2동)을 선출한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일본의역사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 8월 6일 일본의역사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일본의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항의로 시정촉구

플래카드 게첨 및 2001. 8. 10일 정길자의원 외 4명이 일본
대사관을 방문하여 야마노우치간지 참사관을 면담하고 일본
정부가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한 은폐·축소·왜곡 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결의문을 전달하였다.

3) 서초구내 전광판 게재

○ 서초구 관내에 설치된 홍보 및 광고 전광판을 통하여 서초구 의회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중단을 촉구 하였음.

○ 게재기간 : 2001. 8. 13 ~ 9. 3

○ 게재내용

역사왜곡에 대한
일본대사관 항의방문
일시 : 2001. 8. 10(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일본정부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를
즉각 수정하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 게재장소

연번	광고주(관리업체)	전광판 위치	비 고
1	(주)익산	잠원동 37-9	
2	(주)국전	반포1동 707-2	
3	(주)에이원에드컴	서초2동 1336-7	
4	(주)팀애드	잠원동 6-1(리버베이징호텔)	
5	(주)디지털조선일보	반포1동 748-16	
6	(주)서울스포츠기획	반포4동 19-1(대해빌딩)	
7	(주)진원애드	반포4동 19-4	

4) 역사왜곡 시정촉구 플래카드 게첨

-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중단 추진을 위한 서초구의회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홍보를 위해 서초구 관내 주요지점에 플래카드를 게첨 지속적인 홍보효과를 도모 하였음.
- 게첨매수 : 18개
- 게첨기간 : 2001. 8. 13 ~ 2001. 11
- 게첨장소 : 서초구 관내 주요지점 (게첨장소 : 별첨 참조)
- 시정촉구 문안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일본역사 교과서를 수정하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 색 상
 - 문안 기본색 : 흑색
 - 일본역사 교과서를 수정 : 적색
 - 주체 : 청색
 - 바탕 : 흰색

IV 문제점

- 일본의 국수적이고 민족주의 극우세력들이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행위를 은폐하거나 미화 또는 왜곡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수정 기도는 과거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 말할수 없는 고통을 받은 우리민족에게 불신과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당연한 것이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우리 이웃에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에서 지속적인 불신과 경원시하는 것도 한일우호 및 민간교류 위축 또는 경제적인 부작용이 있으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일본의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수 없는데 문제가 있는것임.

1. 민간교류감소 및 대한투자액 위축 등 경제협력부진

-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반대 등으로 대일관계 악화로 인하여 국내의 경기 불안으로 한국 업체들은 일본에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일본의 대한투자액이 급격히 감소, 2001년 1월 ~ 5월까지 총 3억 7100만달러를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8% 감소
- 대일 수출액도 7월말 현재 지난해보다 6.8% 감소
- 반일감정이 고조되자 종전 방한 일본인 관광객이 매년 두자리 이상 증가율 (11 ~ 16%)을 기록하였으나 7월말까지 한자리수 증가(5.2%)에 머물렀으며
- 각급학교와 청소년 및 시민단체들의 자매결연 등 상호방문이 관계악화로 한국측에서 일본교류를 거부 또는 취소하는 사례

2.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 재발생 우려

- 이번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은 일본의 살아있는 양심세력인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21”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불채택 운동을 전개 하였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채택 반대운동을 하여 거의 채택되지 않았으나
- 4년후 일본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측에서 적극적인 채택 노력이 예상됨.

VI. 결론(총평)

-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운곳에 위치하면서 수천년동안 우리 문화를 전수 받으면서도 우리민족에게 수많은 침략행위로 고통을 안겨주었고 특히 일제 식민 등 씻을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만행을 저질러온 역사적 사실을 일부 국수적인 세력들이 은폐·왜곡·미화 하는 등 역사를 사실 대로 기술하지 아니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민들의 한결같은 일본역사 교과서 왜곡중단 주장이 우리 서초구 의회를 비롯한 이러한 각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들의 일관된 노력에 의하여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측의 교과서 채택율이 0.039%에 불과하도록 하였으며 일본정부 및 우익단체의 역사왜곡 행위를 사실상 무위에 그치게 하는 결과를 이루어냈다. 이 결과는 그동안 확대된 한·일간의 민간교류 활성화로 인한 정보공유,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양국민간의 공감대형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있으며 앞으로도 자라나는 일본2세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한·일 양국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역사왜곡문제로 다소 소원해졌던 양국민간의 민간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하여 이 같은 역사왜곡 행위저지에 한·일 양국민이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왜곡 중단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은 당초 일본정부의 왜곡역사교과서 수정 확정 시까지 활동시한을 정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의 교과서 채택율이 미미하므로 이시점에서 활동을 종료하고 추후 필요하다면 본 특별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서초구 의회에서 일본의 왜곡역사교과서 채택 반대를 하고 기초 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역사왜곡에 따른 일본국 대사관 방문을 통하여 결의문 등을 전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대내외의 관심 표명 및 위상을 제고하였다.

【별첨1】

역사왜곡에 대한 정부의 수정요구 내용

1. 수정요구 항목

출판사	항 목 수
扶桑社	25개
기존7종	10개 (日本文教出版 7개, 東京書籍 6개, 大阪書籍 5개, 教育出版 5개, 清水書院 5개, 帝國書院 5개, 日本書籍 2개)

2. 수정요구 상세

가. 扶桑社

主 題 名	教 科 書 內 容(원문인용)	修正 要求 意見
(1) 임나일본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出兵 임나라는 곳에 거점을 둔 것 야마토 군세는 백제와 신라를 도와 고구려와.....싸웠다. 고구려는.....백제와 임나를 地盤으로 한 일본군의 저항 으로 인해 임나로부터 철퇴하고, 반도 정책에 실패한 야마토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나일본부설’은 한국과 일 본의 50여년간의 연구결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설 명백한 오류 - 신라의 지원 요청으로 고구려 군이 왜군 격퇴(광개토왕비문) 상설적인 주둔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명백한 오류 점령국인 일본이 피점령지인 임나에서 철수한 것을 전제로 기술 - 주둔, 철퇴의 기록이 없으므로 오류이며 삭제 필요

主 題 名	教 科 書 內 容(원문인용)	修 正 要 求 意 見
(2) 4세기 후반 삼국관계	◦ 고구려는 반도 남부의 신라 및 백제를 압박	◦ 역사적 사실 오류 - 4세기 후반은 고구려가 신라를 지원하는 관계
(3) 6세기 삼국 및 국제관계	◦ 고구려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지원국인 北魏도 凋落 ◦ 신라와 고구려가 연합하여 백제를 위협	◦ 근거없는 주장 - 당시 고구려는 北魏와 직접 대결하기도 함 ◦ 명백한 오류 - 신라와 백제가 연합하여 고구려의 남하에 공동대응
(4) 삼국의 조공설	◦ 고구려가 돌연 야마토 조정에 접근 신라와 백제가 일본에 조공	◦ '일본서기'만을 근거로 한 기술 (한국과 중국의 史書에는 없는 내용) ◦ 6세기 이후 삼국이 일본보다 정치·문화적 우위에 있었다는 것이 한·일학계의 통설
(5) 왜구	◦ 일본인외에 조선인도 많이 포함 대부분은 중국인	◦ 왜구의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 누락 ◦ '왜구=일본인'이라는 기존의 역사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왜구에 조선인과 중국인을 포함하여 기술
(6) 조선국호	◦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씨 조선을 건국	◦ '조선'이라는 국호 대신 일제 강점기에 사용되었던 부적절한 용어인 '이씨조선' 사용
(7) 임진왜란	◦ 제목에 '조선 출병' ◦ 히데요시는 명을 정복 인도까지 지배하려는 거대한 꿈에 빠져들어 대군을 조선에 보내었다 ◦ 출병 결과 조선의 국토와 사람들의 생활은 현저히 황폐해졌다	◦ 침략을 '출병'으로 기술하여 일방적 침략사실 은폐 ◦ 임진왜란의 원인을 명나라 정복, 히데요시의 개인적 망상만으로 기술 ◦ 전쟁기간 중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인적·물적 피해상 축소

主 題 名	教 科 書 內 容(원문인용)	修 正 要 求 意 見
(8) 조선통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부는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 ◦ 장군이 바뀔 때마다 사절이 에도를 방문 ◦ 부산에 '중씨의 왜관'이 설치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야스의 국교회복 노력에 대한 설명없이 사실만을 기술 ◦ 통신사의 파견목적, 초빙이유 등을 설명하지 않고, 일본장군 습직(襲職) 사절단으로만 기술 ◦ 조선에서 부산 왜관을 설치해준 사실을 은폐하고, 일본이 외국땅에 마련한 행정기관인 듯이 서술
(9) 조선의 서구 열강에 대한 인식과 국제적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열강의 무력위협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 중국의 복속국이었던 조선도 마찬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의 무력위협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일본의 방식과 비교하여 폄하 ◦ 조선을 중국의 '복속국'으로 표현한 것은 삭제 필요
(10)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 질서와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과 베트남은 완전히 그 내부에 들어가 중국 역대 왕조에 복속 ◦ 일본은 중화질서 바깥에서 자유롭게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왜곡한 기술 (당시 책봉과 조공은 의례적 외교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중국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한 일은 거의 없었음) ◦ 조선과 대비하여 일본은 '자주 독립국'이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17세기까지 일본이 중화질서 안에 존재한 사실은 미기술
(11) 일본=무가사회, 조선=문관사회론	◦ 중국·조선 양국은 문관이 지배하는 국가였으므로 열강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적인 근거없이 武家사회인 일본이 文官사회인 조선보다 우월하다는 선입견을 주입하는 표현 - 일본의 대외팽창·침략 호도

主 題 名	教 科 書 內 容(원문인용)	修 正 要 求 意 見
(12) 정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73년, 개국 권유를 거절한 조선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하여 정한론이 터져나왔다 ◦ (사이고는) 자신이 조선에 가서 살해당하면 그것을 명목으로 일본이 출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의 조약체결 거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일본입장에서 편파적으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이 기존의 교린체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했기 때문임을 설명하지 않음 ◦ 조선이 사이고를 살해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처럼 가정
(13) 강화도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군함이 조선의 강화도에서 측량하는 등 시위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군대와 교전한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의 발포를 유도한 계획적인 군사작전이었다는 사실 등 도발의 주체, 목적, 경위 은폐
(14) 한반도 위협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을 향하여 대륙에서 한개의 팔뚝이 돌출 ◦ 조선반도가 일본에 적대적인 국가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일본을 공격하는 절호의 기지가 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위협설을 강조하여 일본 방위 명목으로 한국 침략·지배를 합리화하는 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을 자위전쟁으로 합리화
(15) 일본정부의 조선중립화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정부 가운데는 조선을 중립국으로 하는 조약을 각국에 체결하도록 하고 중립보장을 위해 일본의 준비를 중강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정부 일각에서 잠깐 거론되었던 것을 일본의 조선 강압 정책을 회색하기 위한 의도로 기술 ◦ 일본의 군비증강이 조선강점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을 은폐하고, 조선 중립을 위한 것으로 왜곡

主 題 名	教 科 書 內 容(원문인용)	修正 要求 意見
(16) 조선의 근대화와 일본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의 개국 후, 그 근대화를 돕기 위해 군제개혁을 지원했다. 조선이 외국의 지배에 굴하지 않는 자위력있는 근대국가가 되는 것은 일본의 안전에 있어서도 중요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부식하려 했던 목적을 숨기고, 군사원조로 조선의 독립에 기여한 것처럼 서술함으로써 사실을 호도
(17) 조선을 둘러싼 청·일의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은 최후의 유력한 조공국인 조선만은 잃지 않으려고,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하게 되었다 ◦ 1884년 김옥균 등의 쿠데타가 일어났으나 청의 군대는 친일파를 철저히 탄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대립을 일면적으로 설명하고, 일본이 청을 가상적국으로 삼은 사실을 왜곡 ◦ 김옥균 등의 개화파를 친일파로 기술
(18)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의 난 (갑오농민전쟁) 이라고 불리우는 농민폭동 동학당은 서양의 기독교 (서학)에 반대하는 종교를 믿는 집단 ◦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수도 한성에 육박 ◦ 일본도 갑신사변 후 청과의 합의에 따라 군대를 파견 하였으며, 일청양군이 충돌 하여 일청전쟁이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봉건·반외세 운동을 '동학의 난'이나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며, 농민운동을 종교집단운동으로 한정 한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음 ◦ '한성에 육박한 것'이 아니라 전주성을 점령했을 뿐 ◦ 일본이 청일전쟁 유발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파병한 사실을 은폐하고, 청병파병에 대한 단순 대응조치인 것처럼 서술

主 題 名	教 科 書 內 容(원문인용)	修 正 要 求 意 見
(19) 러일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는 조선 북부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다 ◦ 러시아의 ... 극동에 있어서의 군사력은 일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강되는 것은 명백 (일본) 정부는 더 늦기전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시작할 결의를 굳혔다 ◦ 일본은 한국(조선)의 지배권을 러시아에 인정받았고 유색인종국 일본이 당시 세계 최대의 육군대국이었던 백인제국 러시아에 승리한 것은 세계속의 억압된 민족에게 독립의 한없는 희망을 주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목장을 군사기지로 잘못 해석 ◦ 일본이 먼저 시작한 전쟁을 러시아의 무력이 한반도를 장악하여 일본의 안전이 위협 받음으로써 발발된 것으로 기술 ◦ 만주와 한반도 지배권 확보라는 전쟁의 목적을 은폐하고, '인종간의 전쟁'으로 미화 ◦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받으면서 억압받는 민족에게는 독립의 희망을 주었다는 식으로 모순 되게 기술
(20) 한국강제병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정부는 한국병합이 일본의 안정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영국, 미국, 러시아 3국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한국 국내에서는, 일부에서 병합을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병합 과정에서의 침략 행위와 강제성을 은폐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기술 ◦ 의병투쟁과 안중근 의거 등 한국내 저항과 반발을 축소 하면서, 극소수 친일파의 목소리를 고의로 부각 기술
(21) 식민지 조선개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식민지화한 조선에 철도·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개발을 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시혜론의 관점에서 '개발'이 마치 조선 주민을 위한 것처럼 왜곡 - 수탈과 지배 목적 은폐
(22)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인 및 사회주의자 사이에 불온한 책동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주민의 자경단 등이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중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헌(군경)에 의한 살해사실 은폐 - 살해 대상도 조선인이 대부분 (약 7,00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 조선인, 중국인' 식으로 병렬,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조선인 피해 축소 기술

主 題 名	教 科 書 內 容(원문인용)	修 正 要 求 意 見
(23) 강제동원과 황민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용이나 징병 등은 식민지에서 실시되어 조선에서는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황민화 정책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민화정책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조선에서의 수탈상을 기술하지 않았으며, 조선인을 일본국민의 일부로 간주하여 일본 식민 정책의 본질을 은폐
(24) 군대위안부	[관련 내용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가혹 행위의 상징인 군대위안부 문제를 고의로 누락시켜 잔혹행위의 실체를 은폐 ◦ 최근 유엔인권위에 보고된 바 있는 Coomaraswamy의 「전시 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서」 및 McDougall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관행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도 군대위안부를 반인륜적 전쟁범죄 행위로 규탄 ◦ 일본 정부도 93.8 군대위안부 관련 「관방장관 담화」에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과 모집, 이송, 관리가 감언,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
(25) 한국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아더가 지휘하는 미국군 주체의 국련군은 반격 중국군이 북조선측에 참가 ◦ 종래의 국경선인 북위 38도선 부근에서 전황은 정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군과 중국·북한군의 전쟁으로 묘사함으로써 한국군의 실체를 무시 ◦ 38선을 국경선으로 기술하여 오래전부터 38도선을 경계로 분단되어 있었던 것처럼 묘사

나. 기존 7종

主 題 名	教 科 書 內 容(원문인용)	修 正 要 求 意 見
(1) 고대 한·일관계 (東京書籍 大阪書籍 教育出版 日本書籍 日本文教出版, 清水書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의 영향을 받아…… 조선반도 북부에서 소국을 통일한 고구려가 일어났다 ◦ 한은 조선반도와 베트남의 일부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조선의 존재를 간과하고, 한반도의 첫 통일국가를 고구려로 기술하며, 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 ◦ 연표상의 시기가 부정확 ◦ 한의 지배영역을 과장하여 한반도 전체가 한의 지배를 받은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음
(2) 임나일본부설 (東京書籍 大阪書籍 日本書籍 清水書院 日本文教出版, 帝國書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기에 야마토국이 한반도에서 세력을 잃었다(약해졌다),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에 세력을 뻗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구의 임나일본부설에 근거하여 사실과 다르게 설명
(3) 왜구 (清水書院 帝國書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에 종사하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집단…… 때에 따라 무역을 강요하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기도 ◦ 왜구란 제주도와 북구주의 섬들을 거점으로 ◦ 일본인만이 아닌 조선인과 중국인 등도 섞여 합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구의 해적행위를 주로 무역에 종사하다가 가끔 저지르는 약탈행위로 왜곡·미화 ◦ 제주도를 왜구의 거점으로 설명 ◦ 왜구에 조선인과 중국인을 포함, '왜구=일본인'이란 기존 역사인식을 불식시키려 함

主 題 名	教 科 書 内 容(원문인용)	修正 要求 意見
(4) 임진왜란 (東京書籍 大阪書籍 教育出版 清水書院 帝國書院, 日本文教出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이 (명을 공격하기 위한) 일본군의 통행허가를 거절하자 대군을 조선에 보냈다 ◦ '군대를 보냈다', '바다를 넘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발발의 책임을 조선측에 전가 ◦ 침략성을 은폐하기 위한 표현
(5) 정한론 (東京書籍 教育出版 帝國書院, 日本文教出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정부는 조선에 국교를 열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이 응하지 않아 국내에 정한론이 일어났다 ◦ 중국의 속국으로 위치지워져 있던 조선은 일본과의 국교도 거절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의 거부가 기존의 선린외교 관계를 무시한 채 국교회복을 강요하는 일본측의 태도에서 비롯했음을 설명하지 않고, 정한론의 발생원인을 조선측에 전가 ◦ 당시 조공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 표현
(6) 강화도사건 (帝國書院 教育出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군대가 강화도에서 포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 청은 조선을 종속국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의 포격을 유도한 일본측의 저의를 은폐하고 강화도사건의 원인을 조선측에 전가 ◦ '조일수호조규'의 '조선은 독립국' 조항은 청을 견제하고자 한 것이었음을 설명하지 않음
(7) 동학농민운동 (大阪書籍, 清水書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큰 반란을 일으켜 ◦ 일본은 조선지배를 계기로 삼아 중국으로의 진출 ◦ 청의 출병을 알게 된 일본은 군대를 보내 전쟁을 시작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의 저항을 '반란'으로 표현, '항쟁'이나 '농민운동'이라는 용어가 보다 객관적 ◦ '조선지배'라는 표현은 일본이 당시 조선을 완전 장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왜군파병을 청병파병에 대한 단순 대응조치로 기술하여 일본의 계획적 파병을 은폐

主 題 名	教 科 書 內 容(원문인용)	修 正 要 求 意 見
(8) 한국강제병합 (日本文教出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중근이 이토를 암살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며, 식민지로서 지배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강제병합의 원인을 안중근의 이토 사살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일본의 계획성을 은폐
(9) 황민화정책 (東京書籍, 日本文教出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 조선의 젊은이들 (사진 설명), 조선에서는 지원병제도가 실시되었다 ◦ '천황의 백성'에 걸맞는 황국신민이 되도록 동화를 강요당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병제도의 강제성을 은폐하고, 조선인의 자발적 전쟁 참여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 ◦ 황민화정책의 구체적 기술 미흡, 신사참배 일본어교육 강요 등 구체적 내용 기술 필요
(10) 군대위안부·강제징용 (東京書籍 大阪書籍 教育出版 日本文教出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사람들도 많은 희생 <p>[군대위안부 관련 내용 누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가혹행위의 상징인 군대위안부 문제를 고의로 누락시켜 잔혹행위의 실체를 은폐 ◦ 최근 유엔인권위에 보고된 바 있는 Coomaraswamy의 「전시 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서」 및 McDougall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관행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도 군대위안부를 반인륜적 전쟁범죄 행위로 규탄 ◦ 일본 정부도 93.8 군대위안부 관련 「관방장관 담화」에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과 모집, 이송, 관리가 감언,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

【별첨2】

한국의 수정요구에 대한 일본의 의견

가. 후소사 관계

*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main/top.html>) 인용자료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 토 결 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1) 임나일본부설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출병 任那라는 곳에 거점을 둔	「임나일본부설」은 한국과 일본의 50년간의 연구결과 인정할 수 없는 학설	4세기 후반 야마토 조정은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出兵하였다. 야마토 조정은 반도 남부의 임나(加羅)라는 곳에 거점을 둔 것으로 여겨진다.(P37)	일본 학계에서는, 「임나 일본부설」의 존재를 지지하고 있지 않으나, 한반도 남부의 가야 諸國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倭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본 기술은 「임나일본부」를 명기하고 있지 않고, 또한 「거점을 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여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있음. <u>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야마토 軍勢는 백제와 신라를 도와 고구려와 ... 싸웠다.	명백한 오류 - 신라의 지원요청으로 고구려군이 왜군을 격퇴 (광개토왕비문)	바다를 건너 야마토 조정의 軍勢는 백제와 신라를 도와, 고구려와 격렬하게 싸웠다(P38)	일본 학계에서는, 고구려의 남하에 대해 신라와 백제가 왜에 구원을 요청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광개토왕 비문에는 신라가 왜에 구원을 요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역으로 신라가 고구려왕에 귀의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 이러한 <u>상황에 비추어 본 기술은 적절하지 않고 오류로 생각되며, 정정할 필요가 있음.</u> (자체 정정 신청중(7.2자))
	고구려는 ... 백제와 임나를 기반으로 한 일본군의 저항에 의해	상설적인 주둔을 전제한 내용으로 명백한 오류	고구려는, 백제의 수도 한성(현재의 서울)을 공격, 함락하고, 한반도 남부를 석권하였다. 그러나, 백제와 任那를 地盤으로 한 일본군의 저항으로 인해 정복은 이루지 못하였다.(P38)	일본 학계에서는, 4-5세기에 倭가 한반도에서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와 싸웠다는 것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 또한 「지반으로 하였다」는 기술이 「상설적인 주둔」을 의미하지는 않음. <u>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어,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임나로부터 철회하여 한반도 정책에 실패한 야마토 조정	점령국인 일본이 피점령지의 임나로부터 철수한 것을 전제로한 기술 - 주둔, 철회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오류이며, 삭제 필요	임나로부터 철회하여, 한반도 정책에 실패한 야마토 조정이었으나, 이리하여 다시 자신을 회복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P40)	일본 학계에서는, 가야 제국의 멸망에 의해 한반도 남부에 대한 왜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 이를 「임나로부터 철회하여」라고 표현한 것은 <u>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 토 결 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2) 4세기 후반 삼국 관계	고구려는 한반도 남부의 신라 및 백제를 압박	역사적 사실의 오류 - 4세기 후반은 고구려가 신라를 지원한 관계	고구려는 반도 - 남부의 신라 및 백제를 압박하였다.(P.37)	일본 학계에서는, 4세기말부터 5세기 초에 신라가 고구려에 인질을 보낸 것, 고구려가 신라의 왕위 계승에 간섭한 것 등에 비추어, 신라가 고구려에 종속하고 있었다는 것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 이를 '신라 및 백제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3) 6세기 삼국 및 국제 관계	고구려가 쇠퇴하기 시작하여 지원국인 北魏도 몰락	근거 없는 주장 - 당시 고구려는 北魏와 직접 대결한 적도 있음.	6세기가 되면 한반도의 정치 청세에 변화가 생겼다. 그렇게 武威를 자랑했던 고구려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지원국인 北魏도 凋落으로 향하였다. 대신에 신라와 백제의 국력은 증대하였다.(P.40)	일본 학계에서는, 고구려가 北魏에 자주 조공을 보내고, 北魏가 고구려를 책봉했다는 사실로부터 北魏를 고구려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것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이를 '지원국 北魏'로 표현한 것은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신라와 고구려가 연합하여 백제를 위협	명백한 오류 - 신라와 백제가 연합하여 고구려의 남하에 공동 대응	백제와 야마토 조정의 連繫만은 계속되었다. 신라와 고구려가 연합하여 백제를 위협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이다.(P.40)	일본 학계에서는, 복잡하게 변화하는 4세기 중기부터 6세기 초기에 걸친 삼국 및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관계를 北朝 - 고구려 - 신라, 南朝 - 백제 - 倭라고 하는 도식으로 보는 說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 6세기 초기 삼국관계의 기본적인 틀에 관한 기술로서는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4) 삼국의 조공설	고구려가 돌연 야마토 조정에 접근 ... 신라와 백제가 일본에 조공	「일본서기」만을 근거로 한 기술 (한국과 중국의 사서에는 없는 내용). 6세기 이후의 삼국이 일본보다 정치·문화적 우위에 있었다는 것이 한일 학계의 통설	고구려가 돌연 야마토 조정에 접근하였으며, 이어 신라와 백제가 일본에 조공을 하였다.(P.40)	일본 학계에서는, 일본서기의 기술 및 이 시기의 백제와 신라가 왜를 '敬仰'하는 것 같은 외교관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중국 사료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조공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또한 일본서기의 기술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백제와 신라가 왜와 조공관계에 있었다는 기술은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또한 백제·신라와 왜의 외교상의 조공 관계 문제와 (삼국이) 일본보다 정치적·문화적 우위에 있었는지 여부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이러한 관점에 따라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음.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 토 결 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5) 왜 구	일본인 이외에 조선인도 다수 포함 ... 대부분은 중국인	왜구의 발생 원인에 관한 설명이 누락 「왜구=일본인」이라는 기존의 역사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왜구에 조선인과 중국인을 포함하여 기술	倭寇란 이 당시 조선반도 및 중국 대륙 연안에 출몰했던 해적집단이다. 이들 중에는 일본인 외에 조선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P.97) 足利義滿(아시카가 요시미즈)가 죽은 후 일명무역이 중단되자 다시 왜구의 활동이 활발해졌는데 구성원의 대부분은 중국인이었다.(P.106)	「왜구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제도상 기술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음. 일본 학계에서는, 前期 왜구에 조선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後期(후기) 왜구가 중국인을 주체로 한 것이라는 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u>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6) 조선 국호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씨조선을 건국	「조선」이라는 국호를 대신하여 일제 강점기에 사용된 부적절한 용어인 「이씨조선」을 사용	조선반도에서는 이성계가 14세기말에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씨조선을 건국하였다.(P.107)	일본 학계에서는, 최근 「조선왕조」를 사용하는 경향도 있으나 이성계(태조)가 세운 왕조를 「이씨조선」,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 있음. 이러한 <u>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7) 임진 왜란	제목에 「조선출병」	침략을 「출병」이라고 기술. 일방으로 침략사실은 은폐	「조선 출병」(P.121)	일본 학계에서는, 「文祿・慶長の役」, 「조선출병」, 「조선침략」 등의 호칭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 이러한 <u>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히 데 요 시 는 명을 정복 ... 인도까지 지배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에 사로잡혀 대군을 조선에 보냈다.	임진왜란의 원인을 명의 정복, 히 데 요 시의 개인적 망상만으로 기술	히 데 요 시는 나아가 중국의 명을 정복하여 천황과 자신도 그곳에 살면서 동아시아에서 인도까지 지배하려는 거대한 꿈에 빠져들어 1592년 15만 대군을 조선에 보내었다.(P.121)	일본 학계에서는, 도요토미 히 데 요 시가 동아시아를 정복하는 구상을 갖고 있었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추측이 있음. 이러한 <u>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출병의 결과, 조선의 국토와 사람들의 생활은 현저히 황폐해짐.	전쟁기간중의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축소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출병 결과, 조선의 국토와 사람들의 생활은 현저히 황폐해졌다. 明도 일본과의 전쟁으로 쇠퇴하고 도요토미家の 집에 흔들렸다.(P.121)	이미 「조선의 국토와 사람들의 생활은 현저히 황폐해졌다」고 기술되어 있는 곳이 있고, 취급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기술한 것인지는 집필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만큼, <u>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 토 결 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8) 조선 통신사	막부는 ... 조 선과의 국교 를 ... 회복	이에야스의 국교 회복 노력에 대 한 설명없이 사 실만을 기술	막부는 이에야스 때 히 대요시의 출병으로 단절 되어 있었던 조선과의 국 교를 쓰시마의 宗씨를 통 하여 회복하였다.(P.131)	「이에야스의 국교회복 노력」에 대해 제도상 기술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음.
	將軍이 바뀔 때마다 사절 이 에도를 방 문	통신사의 파견 목적, 초빙이유 등의 설명 없이 일본 將軍 승계 축하사절단이었 음만을 기술	양국은 대등한 관계를 유 지하였으며, 조선에서는 장군이 바뀔 때마다 통신 사로 불리는 使節이 에도 를 방문하여 각지에서 환 영을 받았다.(P.131)	일본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將軍이 바뀔때마다 승계 축하 사절단이 있었다 는 것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취급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는 집필자의 판단에 맡겨 져 있는 만큼, <u>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 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부산에 「宗氏 의 왜관」이 설 치되어	조선이 부산의 왜관을 설치한 사실을 은폐하고 일본이 외국의 토지에 둔 행정 기관인 것처럼 기술	또한, 조선의 부산에는 「宗씨의 倭館」이 설치되 어 약 400-500명의 일본 인이 살면서 무역 및 정 보수집에 종사하였 다.(P.131)	일본 학계에서는, 倭館이 무역 등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倭館의 운영은 宗 氏에 의해 행해진 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취급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를 집필자의 판단에 맡겨 져 있는 만큼, <u>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 을 요구할 수 없음.</u>
(9) 조선의 서구 열강에 대한 인식과 국제적 지위	서구 열강의 위협을 충분 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구미의 무력위협 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일본의 방식과 비교하여 열등하게 평가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 서 중국(淸)은 아편전쟁에 서 본 바와 같이 구미 열 강의 무력 위협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P.184-185)	일본 학계에서는, 당시 조선도 대체 로 중국과 동일한 夷狄觀을 배경으로 구미의 진출에 대응하였다는 것을 폭넓 게 인정하고 있음. <u>학설상황에 비추 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중국의 복속 국이었던 조 선도 동일하 게	조선을 중국의 「 복속국」이라고 표 현한 것은 삭제 필 요	중국의 服屬國이었던 조선도 마찬가지였 다.(P.185)	자체 정정 신청중(7.2자)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 토 결 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10) 전근대 동아시아 질서와 조선	조선과 베트남 은, 완전히 그 내부에 들어가 중국역대 왕조 에 복종 ...	전근대 동아시아 의 국제관계를 왜곡 기술 (당시, 책봉과 조 공은 의례적인 외교형태에 지나 지 않고, 중국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한 적은 거 의 없었음)	예로부터 동아시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 화질서가 존재했다. 조 선과 베트남은 완전히 그 내부에 들어가 중국 역대 왕조에 복속하고 있었 다.(P.198)	자체 정정 신청중(7.2자)
	일본은 중화질 서의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	조선과 비교하여 일본은 '자주 독 립국'이었던 것 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17세기 까지 일본은 중 화질서속에 존재 한 사실은 미기 술	옛날부터 중화질서의 밖에 있었던 일본은 자유 롭게 행동할 수 있었 다.(P.198)	일본 학계에서는, 15세기초 明으로부터 책봉을 받았으나 에도시대에는 책봉, 조공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u>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11) 일본 武家 사회, 조선 문관 사회론	중국·조선 양국 은 문관이 지배하는 국가였 으므로, 열강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 다는 생각도 있음.	논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武家사회 인 일본이 文官 사회인 조선보다 도 우월하다는 선입관을 주입하 는 표현 - 일본의 대외 팽창·침략을 속 임	세번재로, 일본은 에도 시대를 통해 武家사회라 는 측면이 있어서 열강의 무력 위협에 민감하게 반 응하여 서양문명을 배우 는 자세로 전환하였으나 중국, 조선 양국은 문관 이 지배하는 국가였으므 로 열강의 위협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 다는 생각도 있다.(P.185)	일본 학계에서는, 당시 일본이 무사 를 지배 계급으로 하는 사회였다는 점, 아편전쟁에 충격을 받아 기민하게 대 응한 점, 당시 중국·조선 모두 문관이 무관보다 우월한 사회였다는 점, 아편 전쟁의 결과를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 았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음. 이 러한 <u>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 라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라는 생 각도 있다'라는 단정을 피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 토 결 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12) 정한론	1873년 개국의 요구를 거부한 조선의 태도가 무례하였고 ... 정한론이 대두함.	조선의 조약 체결 거부이유를 설명치 않고, 일본 입장에 치우친 기술 - 일본이 기존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음.	국내에서는 1873년, 일본의 개국 권유를 거절한 조선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하여 士族들 사이에 무력을 배경으로 조선에 개국을 강요하는 정한론이 터져 나왔다.(P.202)	일본 학계에서는, 메이지 신정부와 조선의 교섭 결렬 이유는, 신정부가 송부한 문서가 막부시대의 형식과 달라서 조선측이 수리를 거부한 것이라고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거부한 이유는 이미 기술되어 있음. 이러한 <u>확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사이고는) 자신이 조선에 가서 살해되면 그것을 명목으로 일본이 출병	조선이 사이고를 살해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처럼 가정	사이고는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관하여, 자신이 회생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다. 자신이 조선에 가서 살해당하면 그것을 명목으로 일본이 출병하여 조선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P.203)	일본 학계에서는, 사이고 타카모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스스로 사절로서 조선으로 건너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기술 자체가 사이고 스스로의 생각을 나타낸 문맥 가운데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u>확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13) 강화도 사건	일본 군함이 조선의 강화도에서 측량하는 등 시위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군대와 교전한 사건	조선의 발포를 유도한 계획적인 사실 등 도발의 주체, 목적, 경위를 은폐	일본 군함이 조선의 강화도에서 측량하는 등 시위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조선 군대와 교전한 사건(강화도사건, 1875년)을 계기로 일본은 재차 조선에 국교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P.200)	이미 일본 군함이 「시위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군대와 교전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음. 또한 강화도 사건의 목적 등에 관하여 <u>제도상 기술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u>
(14) 조선 반도 위협설	일본을 향해 대륙으로부터 한 팔이 돌출 조선 반도가 일본에 적대적인 국가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일본을 공격하는 절호의 기지가 되어	조선 반도 위협설을 강조하고, 일본의 방위 명목으로 한국 침략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논리 - 청·일 전쟁 및 일러 전쟁을 자위전쟁으로 합리화	일본을 향하여 대륙에서 한 개의 팔뚝이 돌출되어 있다. 조선반도가 일본에 적대적인 대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일본을 공격하는 절호의 기지가 되어 배후지가 없는 섬나라 일본은 자국의 방위가 곤란해진다고 생각하였다.(P.216)	일본 학계에서는, 당시 일본 정치지도자 및 사상가들 사이에는 구미열강이 조선반도에 강력한 발판을 확립할 경우 일본은 독립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음. 이러한 <u>확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 토 결 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15) 일본 정부의 조선 중립 화안	일본 정부내에 서는 ... 조선을 중립국으로 하 는 조약을 각국 에 체결하도록 하고, 중립 보장 을 위해 일본의 준비를 증강시 켜야 한다는 생 각도 있었다.	일본 정부의 일각 에서 약간 논의된 것을 일본의 조선 강압정책을 부정하 는 의도로 기술 일본군비 증강이 조선의 강제 점거 를 위한 것이었다 는 것을 은폐하고, 조선 중립을 위한 것으로 왜곡	일본 정부내에서는 러시아의 힘이 조선에 미치기 전에 조선을 중립국으로 하는 조약 을 각국에 체결하도록 하고, 중립 보장을 위 해 일본의 군비를 증 강시켜야 한다는 생각 도 있었다.(P.216)	일본 학계에서는, 조선 중립화안이 甲申정변이후 일본의 대조선정책 기조 의 하나로서 존재했다는 것은 널리 인 정되고 있음. 이러한 <u>학설상황에 비</u> <u>추어</u> , 또한 「...라는 생각도 있었다」는 단정을 피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 <u>명백</u> <u>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u> <u>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16) 조선의 근대화 와 일본과 의 관계	조선의 개국후 그 근대화를 돕 기 위해서 군제 개혁을 지원했 다. 조선이 외 국의 지배에 굴 하지 않는 자위 력 있는 근대국 가가 되는 것은 일본의 안전에 있어서도 중요 했다.	조선에 대한 일본 의 영향력을 이식 하려고 한 목적을 숨기고, 군사원조로 조선독립에 기여한 것처럼 서술한 것 은 사실을 속임.	일본은 조선의 개국 후, 그 근대화를 돕기 위해 군제 개혁을 지 원했다. 조선이 외국 의 지배에 굴하지 않 는 자위력 있는 근대 국가가 되는 것은 일 본의 안전에 있어서도 중요했다.(P.217)	일본 학계에서는, 당시 조선 반도가 다른 세력하에 들어가는 것이 일본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은 널 리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u>학설상황</u> <u>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u> <u>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u> <u>음.</u> 더욱이 기술상 「군사원조」가 아닌 「군정개혁을 원조」한 것으로 되어 있 음.
(17) 조선을 둘러싼 청·일 대립	청은 최후의 유 력한 조공국인 조선만은 잃지 않으려고 하여 일본을 가상적 국으로 하게 되 었다.	조선을 둘러싼 청 과 일본의 대립을 일면적으로 설명하 고 일본이 청을 가 상적국으로 한 사 실을 왜곡	조공국이 점차 소멸 되어 가는 것은 황제 의 덕이 쇠퇴하는 것 을 의미하고, 중화질 서 붕괴 위기를 나타내 는 것이었다. 이에 청 은 최후의 유력한 조 공국인 조선만은 잃지 않으려고 하여, 일본 을 가상적국으로 하게 되었다.(P.217)	일본 학계에서는, 갑신정변 발발·친 진조약 체결이후의 일본에서는 청과 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 도를 내세워 왔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 고 있음. 이러한 <u>학설상황에 비추어</u> <u>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u> <u>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1884... 김옥균 등의 쿠데타가 일어났으나 ... 청의 군대는 친 일파를 철저히 탄압	김옥균 등의 개화 파를 친일파로 기 술	1884년에는 일본의 명치유신을 본받아 근 대화를 추진하려고 했 던 김옥균 등의 쿠데 타가 일어났으나, 이 때도 청의 군대는 친 일파를 철저히 탄압 했다.(갑신정변) (P.217)	일본 학계에서는, 김옥균 등이 일본 의 정치가·지식인들과 접촉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는 등의 측면에서 「친일파 」로 불리우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u>학</u> <u>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u> <u>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u> <u>수 없음.</u>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 토 결 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18) 동학 농민 운동과 청·일 전쟁	동학의 난(甲午 농민전쟁)으로 불리는 농민폭 동... 동학당은 서양의 기독교 (西學)에 반대하 는 종교를 믿는 집단	반봉건·반외세 운동을 「동학의 난」 및 「폭동」 으로 표현한 것 은 부적절하며, 농민운동을 종 교집단 운동으 로 한정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음.	1894년(명치27년), 조 선 남부에 동학의 난(갑 오농민전쟁)이라고 불리 는 농민폭동이 일어났 다. 동학당은 서양의 기 독교(서학)에 반대하는 종교(동학)를 믿는 집단 이었다.	일본 학계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은 외국세력 및 봉건제도에 반대하는 농민 운동으로 보고 있으나, 지도자가 동학관 제자라는 점 등에서 동학당과의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음. 또한 동 운동은 「 농민운동」, 「반란」, 「반항」, 「혁명적 폭 동」, 「민란」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표 현을 사용하여 설명되고 있는 부분도 있음. 이러한 <u>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 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동학농민군의 기 세가) 수도 한성 에 육박	「한성에 육박」 한 것이 아니라 전주성을 점령 한 것 뿐	그들은 외국인과 부패 한 관리 추방을 목표로 하여, 한 때는 수도 한 성(현재의 서울)에 육박 하는 기세를 보였다.	농민군은 각지에서 정부군을 무찌르 고 전라도 수도 전주를 해방하고, 청·일 전쟁 개전후에는 충청도 수도 공주에서 정부군과 싸웠다는 상황도 근거로 하면 한성을 「위협하는 기세를 보였다」는 표 현은 <u>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일본도 갑신사 변 후에 청과의 합의에 따라 군 대를 파견하였 으며, 일·청 양 군이 충돌하여 일·청전쟁이 시 작됨	일본이 일·청 전 쟁을 유발할 목 적으로 계획적 으로 파병한 사 실을 은폐하고, 청의 군대 파병 에 대한 단순한 대응조치인 것 처럼 서술	극소수의 병력밖에 지 니지 못한 조선은 청에 진압을 위한 출병을 요 청했으나, 일본도 갑신 사변 후 청과의 합의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였 으며, 일·청 양군이 충돌 하여 일·청전쟁이 시작 되었다.	일본 학계에서는, 일본군의 조선출병과 청국군과의 개전에 대하여, 계획적 파병 이었다는 설과, 그렇지않았다는 설이 있 음. 이러한 <u>학설상황에 비추어 사실관 계만의 기술은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19) 러일 전쟁	러시아는... 조선 북부에 군사기 지를 건설했다	별독장을 군사 기지로 잘못 해 석	러시아는 만주의 병 력을 증강하고 조선 북 부에 군사기지를 건설 하였다(P.222)	일본학계에서는 러시아의 행동을 단 순한 삼림벌채사업이 아닌 군사적 시설 의 건설 또는 그 준비로서 널리 인정하 고 있음. 이러한 <u>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 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 토 결 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러시아의 ... 극동 군사력은 일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강되는 것은 명확 ... (일본) 정부는 더 늦기전에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할 결의를 굳혔다.	일본이 먼저 시작한 전쟁을 러시아의 무력이 한반도를 장악하여 일본의 안전이 위협을 받았다고 기술	이대로 목시하면 러시아의 극동에 있어서의 군사력은 일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강되는 것은 명확하였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시작할 결의를 굳혔다. 1904년 2월 일본은 영미의 지지를 받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돌입했다(러일전쟁)(P.222)	일본학계에서는 러시아는 의화단사건 이후 만주를 지배하에 두고 다시 한반도에 대해 세력의 확대를 지향했으며, 그러한 상황에 일본이 위협을 느껴 개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음. 이러한 <u>확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또한, 일측이 먼저 무력을 발동했다는 것은 기술되어 있음.
	일본은 한국의 지배권을 러시아에 인정받았고 ... 유색인종국 일본이 당시 세계최대의 육군대국이던 백인제국 러시아에 승리한 것은 세계의 억압된 민족에 독립의 희망을 주었다.	만주와 한반도의 지배권 확보라는 전쟁의 목적을 은폐하여 「인종간 전쟁」으로 미화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받아 억압을 받은 민족에게는 독립의 희망을 주었다는 것과는 모순된 기술	미국의 포스머스에서 개최된 강화회의 결과, 1905년 9월 포스머스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조선)의 지배권을 러시아에 인정받았고 러시아가 건설한 철도의 권익을 양도받아 남태태의 영유를 확인하게 하였다. 일러 전쟁은 일본이 생사를 건 장대한 국민전쟁이었다. 일본은 이에 승리하여 자국의 안전보장을 확립하였다. 근대국가로서 태어난 지 얼마 안되는 유색인종국 일본이 당시 세계 최대의 육군대국이었던 백인제국 러시아에 승리한 것은 세계속의 억압된 민족에게 독립의 한없는 희망을 주었다.(P.223) 일본의 승리에 용기를 얻은 아시아국에는 내셔널리즘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터키, 인도와 같이 먼나라에서는 단순히 일본에 대한 존경과 공감으로 연결되었으나 중국 및 한국과 같은 가까운 나라에서는 자국에 세력을 확대해 오는 일본에 대한 저항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P.238)	일본학계에서는 일본이 대국 러시아에 승리한 것이 아시아 인민에게 희망을 준 면이 있다는 것과, 이 전쟁결과가 구미에 큰 충격을 준 면이 있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음. 이러한 <u>확실상황에 비추어</u> , 또한 포츠머스조약에 관해 「일본은 한국의 지배권을 러시아로 하여금 인정케하였다」는 전쟁목적 달성에 관한 기술도 있으며, 내셔널리즘에 관한 중국 및 한국에서의 일본에 대한 저항관련 기술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u>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 토 결 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20) 한국 강제 병합	일본정부는 한국 병합이 일본의 안정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영국, 미국, 러시아3국은 ...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국병합의 과정에서 침략행위와 강제성을 은폐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합법적인 것으로 기술	일본 정부는 한국 병합이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영국, 미국, 러시아 3국은 조선 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서로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10(明治43)년 일본은 무력을 배경으로 한국 내 반대를 누르고 병합을 단행했다(한국 병합). (P.240)	일본 학계에서는, 영일동맹, 미국과의 각서, 포츠머스조약 등에 의해 영국, 미국, 러시아 3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널리 인정되고 있음. 이러한 <u>학설상황에 비추어</u> 또한 한 점정의견에 따라 한국병합에 대해 '한국내 반대를 무력을 배경으로 억압하여 병합을 단행했다'고 기술한 점을 감안하면, <u>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또한 '합법적인 것'이라는 기술은 없음.
	한국 국내에서는 일부에서 병합을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의병투쟁 및 안중근 의거 등 한 국내 저항 및 반발을 축소하고 극소수의 친일파를 일부러 부각시켜 기술	한국 국내에서는, 일부에서 병합을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민족독립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심한 저항이 일어나, 그후도 독립회복운동이 끈기있게 진행되었다. (P.240)	자체 정정 신청중(7.2자)
(21) 식민지 조선 개발론	일본은 식민지화한 조선에 철도·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등 개발을 하고 ...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수혜론의 관점에서 '개발'이 마치 조선주민을 위한 것처럼 왜곡 - 수탈, 지배목적의 은폐	한국 병합 후 일본은 식민지화한 조선에 철도·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개발을 하고, 토지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그 때까지의 경작지로부터 쫓겨난 농민도 적지 않았고, 또한 일본어 교육 등 동화정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선사람들은 일본에의 반감이 강해졌다. (P.240)	한국병합후 경지정리 및 관개시설 신설 등 토지개량이 각지에서 행해지고 철도가 부설된 것은 사실이며, 또한 '식민지화한 조선에서'와 '개발'이 일본에 의한 식민지정책의 일환인 점이 기술되어 있고,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농민이 경작지에서 쫓겨나는 동화정책이 진행되었다는 것 등이 기술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u>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 토 결 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22)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조선인 및 사회주의자 사이에 불온한 책동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주민 자경단 등이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 중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관현(군경)에 의한 살해사실은 폐. 살해대상도 조선인이 대부분(약7,00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 조선인, 중국인'과 병렬,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조선인의 피해를 축소기술	이런 혼란중에 조선인 및 사회주의자 사이에 불온한 책동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주민의 자경단 등이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 중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P.256)	일본학계에서는 관동대지진시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운동가 등이 주민등으로 조직된 자경단 및 관현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어 있음. 특정 역사 사실을 어떻게 기술하는가는 집필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만큼, 「주민 자경단 등이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중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기술은 <u>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u>
(23) 강제동원과 황민화정책	징용이나 징병 등은 식민지에서도 시행되어 ... 조선에서는 일본인으로서 동화시키려는 황민화정책이 강화	황민화정책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조선에서의 수탈에 관한 기술이 없고 조선인을 일본국민의 일부로 보고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본질을 은폐	이와 같은 징용이나 징병 등은 식민지에서도 시행되어 조선이나 대만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희생이나 고통을 강요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조선인과 점령하의 중국인이 일본의 광산 등에 끌려가 가혹한 조건하에서 노동해야만 했다. 또한 조선 및 대만에서는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皇民化정책이 강화되고 일본식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정책 등의 강제 등이 추진되었다 (P.283-284)	이미 조선에서의 일본어교육·창씨개명 및 아시아제국에서의 일본어교육·신사참배의 강요 등의 황민화정책이 기술되어 있고, 또한 토지조사사업 및 징용·징병·소위 「강제연행」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음. 그외 구체적으로 어떤내용을 기술할 것인지는 집필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u>제도상 추가 기술을 요구할 수 없음.</u>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 토 결 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24) 군대 위안부	(관련내용 누락)	(관련내용 누락) 일본군에 의한 과혹한 행위의 상징인 군대위안부문제를 고의로 탈락시켜 잔혹한 행위의 실태를 은폐. 최근 유엔인권위에 보고된 Comaraswamy의 「전시군관련 노예문제에 관한 특별보고서」 및 McDougall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취급의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도 군대위안부를 반인륜적 전쟁범죄행위로 규탄 일본정부도 93.8 군대위안부 관련 「관방장관 담화」에서 일본군이 위안소설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점과 모집·이송·관리가 감언, 강압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		일본교과서 검정제도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 사실을 취급하고 그것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는 집필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음. 따라서 「위안부」에 대해서 <u>재도상 기술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음.</u>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 토 결 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25) 한국 전쟁	맥아더가 지휘하 는 미군 군주체의 유엔군은 반격 ... 중국군이 북한측 에 참가	유엔군과 중국·북 한군의 전쟁으로 묘사함으로써 한국 군의 실태를 무시	1950년 6월 북조선은 돌연 남북의 무력통일 을 노려 한국에 침공했 다.(조선전쟁) 여기에 대해 맥아더가 지휘하 는 미군 주체의 유엔 군은 반격하여, 북조선 군을 중국 국경부근까 지 몰았다. 그런데, 이 번에는 중국군이 북한 측에 참가하여 유엔군 을 반격하여, (P.298)	일본 학계에서는, 주로 한국전쟁 을 수행한 것은 초기를 제외하면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의용군)·북한군이었다 는 것은 널리 인정되어 있음. 이러 한 <u>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u> <u>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u> <u>정을 요구할 수 없음.</u>
	종래의 국경선인 북위 38도선의 부 근에서 전황은 정 체	38도선을 국경선으 로서 기술, 옛날부 터 38도선이 경계 가 되어 분단되어 있었던 것처럼 묘 사	종래의 국경선인 북위 38도선의 부근에서 전 황은 정체했다.(1953년 에 휴전협정이 맺어진 다)(P.298)	자체 정정 신청중(7.2자)

나. 기존 7개 출판사

※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main/top.html>) 인용자료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 토 결 파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1) 고대, 한·일관계 (東京書籍, 大阪書籍, 教育出版, 日本書籍, 日本文教 出版, 清水書院)	한의 영향을 받아... 한 반 도 북부에서 소국을 통일한 고구려가 일어났다	고조선의 존재를 간과 하고, 한반도의 첫 통일국가를 고구려로 기술하며, 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원전후경에는 북부에서 고구려가 일어나... (日書P23) ◦ 한의 영향을 받아 주위의 민족도 점차 나라의 통일을 진행하고, 기원전후에는 한반도 북부에서 그 북쪽 지역에 걸쳐 소국을 통일한 고구려가 일어났습니다. (東書P19) ◦ 후에는 북쪽에 고구려, 남쪽에 소국이 많이 일어나... (大書P9) ◦ 세력을 강하게 한 고구려가 중국의 지배를 격파하여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조선 북부에 걸친 지역에 강력한 국가를 이룩했다. (敎出P20) ◦ 4세기 중간쯤 한반도에서는 북쪽에 고구려가 세력을 강화하고 남쪽에 백제와 신라가 나라를 세워 서로 다투고 있었다. (日文P23)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는 고구려의 성립이 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널리 인정되어 있어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또한 제도상 「고조선」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 토 결 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연표상의 시기가 부정확	연표에서 조선은 「구석기시대 ~ 신석기시대」의 다음 구분이 기원전후부터 시작되는 「(소국 분립)」이 되어 있음.(大書P3)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는 조선은 기원전 1000년경에서 청동기시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널리 인정되어 있으나 연표의 기술은 기원전 400년경에 신석기시대에서 소국분립으로 이행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학설상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오류로 생각되며 정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본문에는 기원전 1000년경으로부터 농경이 성하게 되어 청동기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기술이 있음.
	한은 한반도와 베트남의 일부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한의 지배영역을 과장하여 한반도 전체가 한의 지배를 받은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은 유목민족을 공격하여 중앙아시아까지 영토를 넓혀 조선 서북부를 정복하여 낙랑군 등을 두었다. 게다가 베트남 북부도 지배하여 한은 서쪽의 로마 제국에 필적한 대제국으로 발전되었다. (日書P23) ○ 한은 중앙아시아나 한반도 북부도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東書P19) ○ 한은 한반도부터 베트남의 일부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大書P9) ○ 한은 서쪽은 중앙아시아까지 영토를 넓혔다. 동쪽은 낙랑군 등을 두어서 조선 북부를 지배하여 남쪽은 베트남 북부를 지배했다. (數出p19) ○ 한은 중앙아시아나 베트남 북부, 그리고 한반도 북부에도 세력을 넓혔다. (清水P26) ○ 기원전 2세기 후반의武帝 때 국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대부분을 비롯하여 사방에 영토를 넓혔다. 한은 중앙아시아에도 세력을 넓혀 서방과의 교통로를 열었다. (日文P19) 	한이 세력을 미친 한반도 지역에 대하여 본문의 기술, 또는 본문의 기술 및 관련 지도를 보아 한반도 전체가 한의 지배를 받았다는 오해의 여지는 없어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토 결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2) 임나일본 부설(東京 書籍, 大阪書籍, 日本書籍, 日本文教 出版, 清水書院, 帝國書院)	6세기에 야마 토국이 한반도 에서 세력을 잃었다(약해졌다), 야마토정권이 한반도 남부에 세력을 뻗었다	허구의 임나일본 부설에 근거하여 사실과 다르게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왕은 왜국왕으로서의 지위와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는 장군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었다.(日書P30) ○ 한반도에서는 6세기에 백제와 신라가 세력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야마토국가는 한반도에서의 세력을 잃었습니다.(東書P34) ○ 백제와 신라 사이에 낀 가야(가라, 임나) 지방의 작은 나라들은 야마토왕권과의 연결을 이용해서 양국에 대항했습니다. 6세기가 되자 신라 백제의 세력이 가야 지방에 미쳤습니다. 야마토왕권은 군대를 보내 가야지방에서의 이익을 지키려고 했습니다.(大書P17) ○ 야마토왕권은 한반도로의 진출도 도모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중국 황제로의 사자를 몇 번이나 보냈다.(清水P32) ○ 야마토왕권은 반도 남단의 가라(임나)지역과의 연결을 강화하면서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나 신라와 싸웠습니다.(帝國P39) ○ 야마토정권은 철이나 대륙의 우수한 기술을 찾아 한반도 남부에도 세력을 넓힌다.(日文P23) 	<p>일본의 학계에 있어서 「임나일본부」의 존재는 지지되지 않고 있으나 한반도 남부의 가야제국에 대하여 왜에 어떠한 형편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어 있음.</p> <p>본 기술은 「임나일본부」를 명기하고 있지 않아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p>

주제명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토 결과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3) 왜 구 (清水書院, 帝國書院)	무역에 종사하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집단 ... 때 에 따라 무역을 강요 하 기 도 하고, 물건을 빼앗기도	왜구의 해적행위를 주로 무역에 종사하다가 가끔 저지르는 약탈행위로 왜곡·미화	이 때쯤 동지나해 중심으로 해서 널리 무역에 종사하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 있었다. 한반도나 중국에서 그들은 때로는 무역을 강요하거나 물건을 빼앗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명은 그들을 왜구로 불러 일본에게 왜구의 단속을 요구해왔다.(清水P62)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는 왜구에 관해 왜구와 평화적 교역자의 동일 실체의 양면이었다고 하는 설과 통상을 목적으로 한 일본의 선박이 무역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약탈행위」를 한 것을 왜구에 포함시키는 설도 있음.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왜구란 제주도과 북구주의 섬들을 거점으로	제주도를 왜구의 거점으로 설명	왜구는 제주도나 북구주의 섬들을 근거지로 하여 밀무역을 하거나 해적 노릇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구에는 일본인 이외에 조선인과 중국인 등도 참가하고 있었습니다.(帝國P72)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 왜구에 제주도 도민이 포함되고 제주도가 대마도와 함께 활동거점이었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어 있어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일본인만이 아닌 조선인과 중국인 등도 섞여 합류	왜구에 조선인과 중국인을 포함, '왜구=일본인'이란 기존 역사인식을 불식시키려 함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 전기 왜구에 조선인도 포함되어 있었던 후기 왜구가 중국인을 주체로 한 것이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어 있어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토 결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4) 임진왜란 (東京書籍, 大阪書籍, 教育出版, 清水書院, 帝國書院, 日本文教 出版)	조선이 (명을 공격하기 위한) 일본군의 통행 허가를 거절 하자… 대군을 조선에 보냈다	전쟁발발의 책임을 조선측에 전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을 정복함으로써 무시를 통합하려고도 생각한 히데요시는 조선에 일본으로의 복종과 일본군의 명으로의 통행허가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거부되자 1592년 전국의大名을 동원하여 구주의大名을 주력으로 하는 대군을 조선에 보냈습니다.(大書P69) ◦ 히데요시는 명의 정복을 생각하여 구주를 평정하자 대마도의 종씨를 통하여 조선이 명을 공격하는데 협력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조선이 거부하자 1592년 약 15만명의 군세를 조선에 보냈다.(敎出P90) ◦ 히데요시는 전국의大名을 거느리자 명으로의 침략을 꾀하여 조선에도 복종해서 함께 싸우도록 요구했다. 이를 조선이 거부하자 1592(文祿元年)년 히데요시는 16만명의 대군을 조선에 보냈다.(清水P86) 	모든 기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요구하고 요구가 거절되자 군을 보냈다는 경위로 되어 있으며 전쟁 발발의 책임이 조선측에 있다고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군대를 보냈다' '바다를 넘는다'	침략성을 은폐하기 위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 「조선침략」 히데요시는 명(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1592년 조선에 병을 냈습니다.(東書P79) ◦ 표제 「히데요시에 의한 조선침략」 히데요시는 우선 조선을 정복하려고 해서 1592년 15만명의 대군을 가지고 조선으로 쳐들어갔습니다.(帝國P103) ◦ 표제 「바다를 넘는 히데요시군」(日文P85)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는 「文祿・慶長の役」「조선출병」「조선침략」 등의 호칭이 널리 인정되어 있어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어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또한 2개 출판사는 표제에 「조선 침략」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토 결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5) 정한론 (東京書籍, 教育出版, 帝國書院, 日本文教 出版)	일본 정부는 조선에 국교를 열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이 응하지 않아 국내에 정한론이 일어났다	조선의 거부가 기존의 선린외교 관계를 무시한 채 국교회복을 강요하는 일본측의 태도에서 비롯했음을 설명하지 않고, 정한론의 발생원인을 조선측에 전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고 명치신정부와의 국교에 응하지 않은 조선에 대하여 일본은 강한 자세로 국교회복을 요구했다. 조선이 이를 부당하다고 거부하자 일본 정부내에는 사이고 다카모리,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을 중심으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요구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주장(정한론)이 일어났다. (敎出P146) ○ 신정부는 조선과의 국교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 다만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조선은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 니다.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나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은 무력을 조선에 개국시키려는 정한론을 주장하였습 니다만 1873년에 귀국한 이와쿠라 오오쿠보 등은 국내의 정미가 우선이 라고 하여 정한론을 억제했습니다. (帝國P156) ○ 정부는 조선에도 국교를 여는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은 응하지 않아 국내에는 정한론이 일어 났다. (日文P140)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 명치신 정부와 조선과의 교섭 결렬의 이유는 신정부가 송부한 문서가 막부시대의 형식과 상이했기 때문에 조선측이 수리를 거부 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어 있어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또한 일본측이 먼저 행동을 취했다는 것은 기술되어 있음.
	중국의 속국으로 위치지워져 있던 조선은 ... 일본 과의 국교도 거절했다	당시의 조공관계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조선은 중국의 속국 으로 표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속국으로 위치 지워져 있었던 조선은 구 미에 대하여 쇄국하며 일 본과의 국교도 거절하고 있었습 니다. (東書 P133)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는 당시 조선이 중국과 책봉-조공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어 있음.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기술 할지는 집필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음. 또한, 제도상 조공관계 설명을 기술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토 결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6) 강화도 사 건 (帝國書院, 教育出版)	“일본군 대가 강화도에서 포격 받는 사건이 발생 했다.”	조선의 포격을 유도한 일본측의 저의를 은폐 강화도 사건의 원인을 조선측에 전가하고 있음.	신청도서의 기술 내용 (帝國p157) 1875년에 일본 군대가 조선 연안 강화도에서 포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화도 사건) 검정결정 후의 기술 내용 1875년에 조선 강화도 앞 바다에서 무단으로 측량을 하고 있던 일본 군대가 포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화도 사건)	수정요구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에 관한 記述이 불충분 하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 이라는 檢定意見에 의거, “무단 으로 측량을 하고 있었다”라는 記述을 추가함으로써, 일본측의 示威행동이 포격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검정의견에 의거하여 수정되어 있음.
	청은 조선을 종속국으로 간주	‘조일수호조규’의 ‘조선은독립국’ 조항은 청을 견제하고자 한 것이었음을 설명 하지 않음	1875년의 강화도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페리의 (對일본 문호 개방) 방법을 모방하여, 다음 해에 군대를 인솔한 사절단을 조선에 보내 압력을 가함으로써 日朝修好條規를 체결, (조선을) 開國시켰다. 이 조약은 조선 에게 있어 불평등조약이었다. 또한, 조약상 조선은 독립국 으로 되어 있었으나, 청나라는 조선을 종속국으로 간주하고 있었다.(敎出p147)	제도상, 日朝修好條規 조항의 배경 및 의도에 대해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함.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토 결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7) 동학농민 운동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큰 반란을 일으켜	농민의 저항을 '반란' 으로 표현 '항쟁'이나 '농민운동'이라는 용어가 보다 객관적	1984년, 조선 남부에서 동학을 믿는 농민에 의한 대혼란이 발생하자, 조선은 청나라에 援軍을 요청했다. (淸水p150)	일본 학계에서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농민전쟁」, 「반란」, 「반항」, 「혁명적 폭동」, 「民亂」등, 연구자 마다 각기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음. 이와 같은 관련 학설 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일본은 조선지 배를 계기로 삼아 중국으로의 진출	'조선지배'라는 표현은 일본이 당시 조선을 완전 장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음	일본은, 조선을 지배할 계기를 포착, 결국은 중국 으로의 진출까지도 엿볼수 있게 되었다. (大書p131)	본문의 기술 내용은 "일본은 조선을 지배할 계기를 포착, 결국은 중국 으로의 진출도 엿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조선을 완전히 장악했다." 고는 기술되어 있지 않음. 또한, 다음 節인 "한국併합과 조선 사람들" 에서 한국의 식민지화와 일본의 지배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때,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 할 수 없음.
	청의 출병을 알게 된 일본은 군대를 보내... 전쟁을 시작 하였다	왜군파병을 청병파 병에 대한 단순 대응 조치로 기술하여 일본의 계획적 파병을 은폐	청나라의 出兵을 알게된 일본은, 스스로도 군대를 보내 청나라 군과 싸우기 시작했다. (淸水p150)	일본 학계에서는, 일본군의 조선 出兵과 청나라 군과의 開戰에 대해, 계획적인 派兵이었다고 보는 학설과, 이를 부인하는 학설 등이 존재함. 이와같은 학설 상황에 비추어, 사실 관계만을 기술한 것에 대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토 결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8) 한국강제 병합	안중근이 이토를 암살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며, 식민지로서 지배했다	한국 강제병합의 원인을 안중근의 이토 사살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일본의 계획성을 은폐	<p>신청도서의 기술 내용 (日文p172)</p> <p>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여, 각지에서 의병 투쟁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안중근이, 초대 統監인 伊藤博文을, 만주 하얼빈에서 암살했다. 이에, 일본은, 1910(明治43)년, 한국을 일본 영토에 併合(한국併合), 조선이라고 호칭, 식민지로서 지배했다.</p> <p>검정결정후의 기술 내용</p> <p>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여, 각지에서 의병 투쟁을 계속했다. 그러던중, 안중근이, 초대 統監인 伊藤博文을, 만주 하얼빈에서 암살했다. 일본은, 반일투쟁을 군대와 경찰의 힘으로 저지하고, 1910(明治43)년, 한국을 일본 영토에 병합하여 (한국併合), 조선이라 호칭하며 식민지로서 지배했다.</p>	수정요구의 대상이 된 기술에 대해, 「伊藤博文 암살이 한국併合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검정의견에 의거, “이에”라고 하는 직접적인 원인인 듯한 문언이 삭제됨으로써, 이미 검정의견에 의거하여 수정이 이루어졌음.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토 결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9) 황민화정책	지원한 조선의 젊은이들(사진 설명), 조선에서는 지원병제도가 실시되었다	지원병제도의 강제성을 은폐하고, 조선인의 자발적 전쟁참여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삼아줄 우려	(東書p171) 지원한 조선의 젊은이들(사진 설명) 조선에서는, 1938년에 육군 지원병제도가 만들어졌다. (본문) 조선에서는 皇民化라는 이름 하에, 일본어의 사용 및 조선식 이름 표기를 일본식 씨명으로 바꾸는 창씨개명(강제) 추진했다. 또한, 지원병제도를 실시, 조선 사람들도 전쟁에 동원했다.	사진과 같은 페이지의 본문에서는 “지원병제도를 실시, 조선 사람들도 전쟁에 동원했다.”라고 이미 기술됨.
	‘천황의 백성’에 걸맞는 황국 신민이 되도록 동화를 강요당했다	황민화정책의 구체적 기술 미흡, 신사참배, 일본어교육 강요 등 구체적 내용 기술 필요	식민지 사람들은 전쟁중의 “천황의 백성”에 걸맞는, 皇國의 臣民이 되도록 동화를 강요받았다. (日文p203)	동 페이지에는 이미 “식민지인 대만이나 조선에서는, 병사의 모집이 시작되어, 宮城(동경의 皇居) 및 神社를 향해 절을 하도록 한다든지, 고유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었다. (창씨개명)”라는 식으로, 皇民化정책의 구체적인 기술이 있음. 또한, 이미 한국併合 부분에서, 사진과 함께 “일본어를 강제하고, 민족의 자각을 없앴으로써 일본에 동화시키려 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이미 이상과 같은 기술이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기술할지는 집필자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어, 제도상 더 이상의 기술을 요구할 수는 없음.

한국측 수정요구			見本本 기술	검토 결과
주제명	교과서 내용	수정요구 의견		
(10) 강제징용, 군대위안 부	여성과 어린 이를 포함한 일반 사람들도 많은 희생 〔군대위안부 관련 내용 누락〕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가혹행위의 상징인 군대위안부 문제를 교외로 누락시켜 잔혹행위의 실체를 은폐 최근 유엔인권위에 보고된 바 있는 Coomaraswamy의 「전시 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특별 보고서」 및 McDougall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서」 에서도 군대위안부를 반인륜적 전쟁범죄 행위로 규탄 일본정부는 93.8 군대위안부 관련 「관방장관 담화」에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직 간접 적으로 관여했음과 모집, 이송, 관리가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 졌음을 인정	일본과 독일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을 강제로 연행 하여, 본국의 광산이나 공장에서 일하도록 만들 었다. 일본에서 노동을 강제받은 조선인, 중국인 등의 근로조건은 가혹했 으며 임금도 낮아, 지극히 힘든 생활을 강요받았다. (東書p175) · 조선으로부터 약 70만명, 중국으로부터 약 4만명을 강제적으로 일본에 연행하여 광산 및 공장 등에서 일을 시켰다. (大書p171) ·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일본에 연행된 약 70만명의 조선인 및 약 4만명의 중국인은, 탄광 등 힘든 노동현장 에서 일하였다. 또한, 징병제도하에서, 대만 이나 조선의 많은 남성이 병사로서 전쟁터에 보내 졌다. 더욱이 많은 조선 여성 등도 공장 등으로 보내졌다 · 국내 노동력 부족을 보충 하기 위해, 조선으로부터 약 70만명, 중국으로부터 약 4만명이 강제적으로 일본에 끌려와, 탄광등 가혹한 노동에 종사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대상, “학습지도요령”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선택하여, 그것을 어떠한 형식 으로 기술할 것인지는 집필자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음. 따라서 제대상, “위안부”에 대해, 기술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음.

【 별첨 3 】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일본정부가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은폐·축소·왜곡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일본정부가 2002년부터 사용할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내용중 과거사의 은폐·축소·왜곡된 항목을 즉시 시정하도록 강력 조치하고 재검정할 것을 적극 촉구하는 바이다.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일본의 굴절된 과거 침략행위 역사교육이 또다시 일본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대오 각성하기 바라며, 진실된 역사관 확립 으로 일본의 다음 세대가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한·일 관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는 바이다.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일본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은 한일 양국간의 선린우호 관계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 문제를 한·일 외교사안과 연계하지 않는등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 피해대상국중 가장 소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하여 이는 국민 감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향후 확고한 대응정책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작으로 일본사회의 우경화를 가속화 시켜 과거 군국제국주의로의 환원을 시도하려는 의도의 의구심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계하기 바라며, 동아시아 평화공존을 위하여 일본의 역할에 대하여 진심으로 숙고하기 바란다.

이와 같이 서초구의회는 일본의 중학교 검정교과서의 왜곡 및 미화 행위에 대하여 40만 서초구민과 함께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의원일동

【 별첨4 】

일본역사교과서 왜곡개요 및 시정요구 이유

2001. 8.

대한민국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I. 교과서 왜곡 개요

일본정부는 일본학생이 일본민족사에 대한 애정을 깊게 하고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기를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사의 엄연한 사실과 연구성과를 서슴치 않고 왜곡, 은폐, 조작하였다.

첫째, 일본 역사의 철저한 미화와 일본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사 전반을 교묘하게 자주성·진실성이 없는 역사로 훼손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둘째, 고대사에서 근거없는 〈임나일본부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3국과 일본관계를 역사적 사실과 관계없이 아전인수격으로 조작한 일본고전인 〈일본서기〉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셋째, 조선왕조를 중국의 속국으로 간주하고 우리민족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왜구, 임진왜란 등 침략을 정당화하고 일본이 수교재개를 애걸해 파견한 조선통신사를 일본의 정권교체에 대한 사대적 조공(조공)으로 왜곡했다.

넷째, 근대의 제국주의 침략과 강점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거나 회피하기에 급급하여 근대화 지원, 외세로부터의 보호등의 꾀변으로 합리화 하였다.

다섯째, 식민지배의 잔학성과 강제 수탈을 한국 근대화에 기여 또는 은혜로운 시혜로 강변하며 민족운동을 폭동으로 서술했다.

여섯째, 침략전쟁 과정에서 저지른 무고한 학살, 잔학한 만행을 피해자, 피해국이 모독감을 가질 정도로 책임전가하고 종군위안부, 인권말살 등을 은폐하였다.

Ⅱ. 우리의 시정요구 이유

일본은 한국정부의 교과서 수정요구를 부당하고 몰상식한 내정간섭으로 몰아치며 감정적인 대응을 서슴치 않고 있다. 제국주의 망령이 되살아 나고 있는 느낌이다. 한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느냐는 그 국가의 국민에 대한 통치권의 행사로써, 이는 그 국가의 국내문제임은 상식에 속한다. 따라서 타 국가는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이에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간섭 원칙에는 몇가지 예외가 있다. '국제법 위반에 대한 간섭' '조약의 규정에 의한 간섭' '인도를 위한 간섭' '간섭에 대한 반대간섭' 등이 있다.

1. 일본정부가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검인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항의는 '국제법 위반과 신의 배반에 대한 간섭'으로 합법성이 있다.

첫째,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제2조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일본의 대한침략조약이 모두 이미 무효이며, 1905년 이후 일본의 한국 지배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침략임이 확인됐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가 불법적인 한국지배에 접속되는 내용의 교과서를 검인정한 행위는 한일기본조약 제2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둘째, 1966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동 규약 제13조제1항에 “당사국은 교육에 의해 모든 사람이 효과적으로 사유로운 사회에 참가하고, 모든 국민간의 이해, 관용과 우호를 촉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에 합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의 교과서를 검인정한 행위는 상기 규정중 일본 국민이 ‘모든 국민간의 이해, 관용과 우호의 촉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규정에 위반한 것이다.

셋째,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데 대하여 사죄하고, 앞으로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진 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한·일 양국간에 새로운 선린관계를 수립하자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넷째, 1995년 〈유네스코 평화인권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선언〉에 동참해 놓고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검인정하여 국제분쟁을 야기한 것은 국제질서 파괴를 자행한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잔학한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없이 교과서에 한국사를 왜곡하고 지도층이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듯한 시대 착오적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2. 일본정부는 진실된 역사교육을 갈망하는 일본의 양심 세력인 시민단체, 학계에서도 왜곡된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바 이제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내의 살아있는 양심세력으로서 일본스기나미구 학부모,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워크 21, 도치기현 교직원 조합등 각종 시민단체, 학자들이 일본의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가르치려는 적극적인 운동으로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노력이 절대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더 이상 채택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3. 왜곡된 역사교과서로는 한일 양국간 우호 증진에 결코 바람직한 미래가 보장될수 없다.

일본이 과거의 침략행위를 잘못된 역사를 올바로 기술하지 아니하고, 2차 세계대전의 패망등 과거역사를 왜곡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양국 국민간의 우호 증진과 양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진정한 이웃국가로서는 도저히 신뢰할수 없는 처사이며, 일본의 자라나는 다음세대에 과거 군국주의 부활등 우경화를 가속화시켜 또다시 세계평화를 저해할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는 것임.

【별첨5】

무라야마 내각총리대신 담화

지난 대전이 종말을 고한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금 그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되신 내외의 많은 분들을 상기하면 만감에 가슴이 저미는 바입니다.

패전 후 일본은 불타버린 폐허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늘날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자랑이며 그것을 위하여 기울인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지(英知)와 꾸준한 노력에 대하여 저는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진 지원과 협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 아시아·태평양 근린제국, 미국, 구주제국과의 사이에 오늘날과 같은 우호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본은 평화롭고 풍요로워 졌지만 우리는 자칫하면 이 평화의 존귀함과 고마움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 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근린제국의 국민들과 협조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여러 나라와의 사이에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특히 근현대에 있어서 일본과 근린 아시아제국과의 관계에 관한 역사 연구를 지원하고 각 국과의 교류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하는 평화우호교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전후 처리문제에 대하여도 일본과 이들 나라와의 신뢰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저는 앞으로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전후 50주년이라는 길목에 이르러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미래를 바라다보며 인류사회의 평화와 번영에의 길을 그르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경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패전의 날로부터 5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나라는 깊은 반성에 입각하여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척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협조를 촉진하고 그것을 통하여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지향하여 핵확산금지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간요(肝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속죄이며 희생되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길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지하는 데는 신의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기념할만한 때에 즈음하여 신의를 시책의 근간으로 삼을 것을 내외에 표명하며 저의 다짐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1995년 8월 15일

내각총리대신 村山富市

村山総理大臣談話 戦後 50 周年の終戦記念日に当たって

先の大戦が終わりを告げてから、50年の歳月が流れました。今、あらためて、あの戦争によって犠牲となられた内外の多くの人々に思いを馳せるとき、万感胸に迫るものがあります。

敗戦後、日本は、あの焼け野原から、幾多の困難を乗り越えて、今日の平和と繁栄を築いてまいりました。このことは私たちの誇りであり、そのために注がれた国民の皆様一人一人の英知とたゆみない努力に、私は心から敬意の念を表わすものであります。ここに至るまで、米国をはじめ、世界の国々から寄せられた支援と協力に対し、あらためて深甚な謝意を表明いたします。また、アジア太平洋近隣諸国、米国、さらには欧州諸国との間に今日のような友好関係を築き上げるに至ったことを、心から喜ぶしたいと思います。

平和で豊かな日本となった今日、私たちはややもすればこの平和の尊さ、有難さを忘れがちになります。私たちは過去のあやまちを2度と繰り返すことのないよう、戦争の悲惨さを若い世代に語り伝え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とくに近隣諸国の人々と手を携えて、アジア太平洋地域ひいては世界の平和を確かなものとしていくためには、なによりも、これらの諸国との間に深い理解と信頼にもとづいた関係を培っていくことが不可欠と考えます。政府は、この考えにもとづき、特に近現代における日本と近隣アジア諸国との関係にかかわる歴史研究を支援し、各国との交流の飛躍的な拡大をはかるために、この2つを柱とした平和友好交流事業を展開しております。また、現在取り組んでいる戦後処理問題についても、わが国とこれらの国々との信頼関係を一層強化するため、私は、ひき続き誠実に対応してまいります。

いま、戦後 50 周年の節目に当たり、われわれが銘記すべきことは、来し方を訪ねて歴史の教訓に学び、未来を望んで、人類社会の平和と繁栄への道を誤らないことでもあります。

わが国は、遠くない過去の一時期、国策を誤り、戦争への道を歩んで国民を存亡の危機に陥れ、植民地支配と侵略によって、多くの国々、とりわけアジア諸国の人々に対して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ました。私は、未来に誤り無からしめんとするが故に、疑うべくもないこの歴史の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ここにあらためて痛切な反省の意を表し、心からのお詫びの気持ちを表明いたします。また、この歴史がもたらした内外すべての犠牲者に深い哀悼の念を捧げます。

敗戦の日から 50 周年を迎えた今日、わが国は、深い反省に立ち、独善的なナショナリズムを排し、責任ある国際社会の一員として国際協調を促進し、それを通じて、平和の理念と民主主義とを押し広め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同時に、わが国は、唯一の被爆国としての体験を踏まえて、核兵器の究極の廃絶を目指し、核不拡散体制の強化など、国際的な軍縮を積極的に推進していくことが肝要であ

ります。これこそ、過去に対するつぐないとなり、犠牲となられた方々の御霊を鎮めるゆえんとなると、私は信じております。

「杖るは信に如くは莫し」と申します。この記念すべき時に当たり、信義を施政の根幹とすることを内外に表明し、私の誓いの言葉といたします。

平成7年8月15日
内閣総理大臣 村山富市

【별첨6】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관련부분)

1.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은 일본국 국민으로서 1998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체재 중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의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현재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회담의 결과,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하였다.

2. 양국 정상은 한일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함께 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하 생략)

1998년 10월 8일, 도쿄

대한민국 대통령
김 대 중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오부치 게이조

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抄)

1. 金大中大韓民国大統領夫妻は、日本国国賓として1998年10月7日から10日まで日本を公式訪問した。金大中大統領は、滞在中、小淵恵三日本国内閣総理大臣との間で会談を行った。両首脳は、過去の両国の関係を総括し、現在の友好協力関係を再確認するとともに、未来のあるべき両国関係について意見を交換した。

この会談の結果、両首脳は、1965年の国交正常化以来築かれてきた両国間の緊密な友好協力関係をより高い次元に発展させ、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を構築するとの共通の決意を宣言した。

2. 両首脳は、日韓両国が21世紀の確固たる善隣友好協力関係を構築していくためには、両国が過去を直視し相互理解と信頼に基づいた関係を発展させ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

小淵総理大臣は、今世紀の日韓両国関係を回顧し、我が国が過去の一時期韓国国民に対し植民地支配により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と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述べた。

金大中大統領は、かかる小淵総理大臣の歴史認識の表明を真摯に受けとめ、これを評価すると同時に、両国が過去の不幸な歴史を乗り越えて和解と善隣友好協力に基づいた未来志向的な関係を発展させるためにお互いに努力することが時代の要請である旨表明した。

また、両首脳は、両国国民、特に若い世代が歴史への認識を深めることが重要であることについて見解を共有し、そのために多くの関心と努力が払われる必要がある旨強調した。

(以下省略)

1998年10月8日、東京

日本国内閣総理大臣

小 淵 恵 三

大韓民国大統領

金 大 中

【별첨7】

플래카드 게첨 장소

연번	동사무소	게첨장소	비고
1	석초1동	석초1동 16/2-6번지 교대역 사거리	
2	석초2동	석초2동 1331번지 우성쇼핑앞 사거리	
3	석초3동	석초3동 1730번지 석초역 5번 출구앞 사거리	
4	석초4동	석초4동 1690-3 앞 장안말길	
5	잠원동	잠원동 58-14 신동근린공원앞	
6	반포본동	반포본동 반포초등학교 앞 육교	
7	반포1동	동청사 앞 주공아파트 입구	
8	반포2동	신반포3차아파트입구 건너편 주공(아)담장	
9	반포3동	반포3동 74-1 우성(아) 입구 건너편	
10	반포4동	반포4동 94-2앞 사평로상 육교	
11	방배본동	방배본동 795-17 방배대로	
12	방배1동	방배1동 909-9 방배역앞 표령토	
13	방배2동	방배2동 444-44 사당역 11번 출구	
14	방배3동	방배역 2번 출구 동양증권앞	
15	방배4동	방배4동 874-9,10 내방역	
16	양재1동	양재1동 12-2 앞 양재역 교차로	
17	양재2동	양재2동 326-7 번지 앞 양재대로변	
18	내곡동	내곡동 염곡육교	